

총선 이후 진보의 과제
우파에 굴종하는
민주당을 비판해야

▶ 3, 4 면

KTX 민영화
정치적 투쟁으로
우파 내분을 이용해야

▶ 8 면

북한 위성 발사 이후
반제국주의
관점이 중요하다

▶ 5 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서울에서
대정부 투쟁도 건설하자

▶ 10 면

보시라이 사태
심각하게 분열하는
중국 지배자들

▶ 11 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1772005 821003 18

Left21.com

제80호 | 2012년 4월 28일 ~ 5월 13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프트21

도전 받는 유럽 긴축 정책



유럽에서 노동자들의 반감과 행동 속에 지배 계급의 긴축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긴축정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긴축이 경제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 그리스의 위기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리스의 몇 공급이나 되는 스페인도 위기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탈리아, 영국 등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나라들로 재정 위기가 확산되며 유럽 지배자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다. 긴축의 모범생으로 여겨지던 포르투갈의 경제 침체는 더 심화하고 있다.

둘째, 긴축을 추진했던 정부들이 위기에 빠지거나 붕괴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네덜란드 정부가 제물이 됐다. 그리스 긴축을 강력히 지지했던 네덜란드 정부는 정작 자기 나라에서 삭감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붕괴했다. 그 결과 유럽 주요국의 증시가 폭락했다.

프랑스 대선에서도 신자유주의 추종자인 사르코지가 재선에 실패할 듯하다. 긴축이 프랑스 대선의 핵심 쟁점이었다. 프랑스 사회당은 반긴축 정서의 초점 구실을 일부나마해서 이득을 봤다.

물론 르펜의 부상은 긴축이 낳은 정치적 양극화도 보여 줬다. 사르코지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며 극우에게 공간을 열어 줬다.

프랑스 대선 결과는 파장을 낳을 것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과 동맹해서 유로존의 취약 국가들에게 긴축안을 강요해 온 핵심 인물인 사르코지가 물러나면 긴축 정책은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정치적 타격

셋째, 유럽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긴축 정책에 맞서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반복된 대규모 노동자 총파업 속에 흔들려 왔다. 베를루스코니 사임 이후 들어선 이탈리아 정부도 노동자 파업과 시위에 직면해 있다. 공장 점거파업도 벌어졌다.

포르투갈에서는 3월 22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여 운송 체계가 마비됐다. 스페인에서는 3월 29일 총파업이 벌어졌고 2백만 명이 거리로 나섰다.

영국에서는 5월 10일 연금 삭감에 반대하는 파업에 50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삭감안과 민영화를 밀어붙인 캐머런 정부가 추문 속에 위기로 빠지면서 노동자들의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더 큰 투쟁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긴축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유럽 노동자 투쟁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이 최근 언론 파업, KTX 민영화 반대 투쟁 등에 연대하면서 6월 경고 파업과 8월 말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반갑다. 정부·여당의 위기와 분열 속에서 노동자들도 자신감을 회복하는 추세다.

광범한 노동자 연대, 단결 투쟁으로 우리의 저력을 보여 주자.

다음 호부터는 신문사 사정으로 발행일이 이틀 뒤인 월요일로 바뀝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월 29일 스페인 1천만 총파업!

5월 10일 영국 50만 파업 예정!

▶ 관련기사 6·7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리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이건희: “고소한 사람들이 수준 이하의 자연인”
이명희: “건희가 어린애 같은 발언을 ... ”
이건희: “감히 나보고 ‘건희, 건희’ 할 상대가 안 된다.”
삼성 ‘또 하나의 가족’의 실제

“CJ 이재현 회장을 위한 예약제 주점인 이 릉살롱에 미래기획위원장인 박승준을 대동, 신인 연예인이 포함된 5~10명의 접대부를 동석시켜 술을 마시고, ... ‘삼촌(이 회장), 조카(박 위원장)’로 칭하는 등 상호 친분을 과시하며, 주로 미디어법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

경찰의 내사 보고서, 대한민국 0.1퍼센트가 나라 걱정하는 법

“대통령이 되면 119에 전화해 ‘나 대통령 김문순데’라고 할 생각인가.”
“이제 전 국민의 이름을 몰아봐 주실 것 같아 설레인다.”

‘따먹문수의 대권 출마 선언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

“불법 사찰에 웬 추잡한 중놈이 사나 했더니 ‘최시중’이란 놈이네요.”
명진스님

“박[근혜] 위원장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고 하는데, 노동자 인권 탄압의 효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였다. 마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 꿈이 민주화’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노화찬, MBC 100분 토론

“저와 그 여자의 말 중 누구 말을 믿겠느냐. ... 제수가 쌍꺼풀 수술을 한 뒤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 꾸짖어 돌려보낸 적이 있다.”
김형태의 추한 변명

“늙어서는 지조를 지켜야 한다.”
젊어서 지조를 버린 이재오가 박근혜에게 아부하는 이상득을 욕하다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4월 29일(일) 오후 1시 종로 보신각

2012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주최: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5월 1일(화) 오후 2시 전국동시개회 (서울은 2시 서울역에서 모여 서울시청광장까지 행진해 4시에 본집회 개최)

12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주최: 민주노총

5월 11일(금) 시간: 장소 미정

불법 사찰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전국노동자대회

주최: 민주노총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입), 인사청(건국대입), 풀무질(성균관대입), 이름책반(대חק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미국 광우병 발생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받았으며 최고기 수입을 강행한 미국에서 또 광우병이 발견됐다. 우석균 광우병대책위 전문가 자문위원(사진)과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싣는다.

미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국에서 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소의 0.1퍼센트만 선별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많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려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광우병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식품 순환 체계와 사료 생산·순환 체계에 광우병 유발물질(프리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언제든 다시 발생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미국에서는 식품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 검사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당장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면 한국 정부가 8단계에 걸쳐 미국의 식품 안전 체계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수입 중단은커녕 검역중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하려다 촛불 때문에 추가협상으로 개방 폭을 줄이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또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도 중단시켜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신뢰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무엇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고기 덩어리 형태가 아니라 식재료에 포함돼 있는 경우는 원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유통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람들은(불안감에) 쇠고기를 먹을 수 없고 덩달아 소비 위축 때문에 애꿎은 국내 축산 농가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촛불시위가 없었다면 이미 국내에 광우병 쇠고기가 유통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촛불시

2008년 촛불운동 때 정부 광고 정부의 거짓말이야말로 ‘광우병 괴담’ 아닌가.

위를 ‘촛불 난동’이라고 부른 정부 당국자들과 보수 언론들은 그나마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 준 것이 촛불 시민들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참에 아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 조건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촛불시위 덕분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게 됐지만 이를 판별하는 것은 미국의 민간 축산업체들이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광우병 유발 물질이 미국의 식품 생산 체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수입을 막거나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수입 위생 조건 개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발효된 한미FTA에 따르면 수입 중단 조치는 물론이고 검역 중단 조치도 ISD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FTA도 빨리 폐기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조차 수입 중단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정호중

송도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4월 20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광범한 반대 여론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는데 이제 법을 만들거나 고치지 않고도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품수를 쓴 것이다.

진보진영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 병원’ 설립에 반대해 왔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외국인이 대거 밀려들지 않는 한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될 ‘외국인 병원’이 실제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외국인 병원’은 건강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다.

대기업만 배불릴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돈 없는 서민의 ‘햇병’은 더 깊어질 것이다.

실제로 역대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예상 만큼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자 외국인 병원 유지가 어

려울 수 있다며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도록 법을 고쳤다. 그 다음에는 외국인 병원 설립에 국내 자본 투자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지금 삼성과 KT&G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전체 의료인력의 상당수를 내국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명품’ 병원

결국 한국 자본이 투자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진이 진료하는 이름만 ‘외국인’ 병원이 생길 판이다. 처음에는 소수 부자들에게만 비싼 의료비를 받는 명품 병원이 되겠지만 곧이어 ‘명품’ 민영보험이 생길 것이다. 나중에는 건강보험을 없애자는 얘기도 나올 것이다.

처음 추진할 때 제주도를 포함해

4개였던 경제자유구역이 지금은 7개다. 추가로 경기, 강원, 충북, 전남에서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을 신청해 둔 상태다.

한미FTA에는 이런 영리병원 허용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역진방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 모든 과정에 원죄가 있을 뿐 아니라 인천시장 송영길은 영리병원 특별법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하다. 지금도 단지 ‘일방적’인 절차만을 문제 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이 이런 송영길 시장을 비판한 것은 옳은 일이다.

진보진영은 ‘묻지마 야권연대’가 아니라 민주당에 독립적인 자세로 ‘이명박근혜’의 대못질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정호중

사법부의 광노현 공격이 노리는 것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4월 17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받은 벌금 3천만 원보다 형이 크게 늘어났다. 총선에서 패배를 면한 우파가 광 교육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 것이다.

이것은 서기호 전 판사의 표현대로 우파가 내린 ‘괘씸죄’라 할 만하다. 우파는 광 교육감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진보적인 교육개혁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그래서 광 교육감 공격을 통해 진보 교육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반면 법원은 우파인 전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이 사립학교 이사장 등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사실은 “대가성이 없다”면서 면죄부를 줬다.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에만 겨우 벌금 1백5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 뿐이다.

검찰은 명품 매장과 특급 호텔 등에서 법인카드를 7억 원이나 유용한 MBC 사장 김재철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법부는 BBK, 내국동 땅 문제 등 이명박과 그 측근들의 온갖 부패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능했고, 청와대의 불법 사찰과 같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수사도 친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법원이 광 교육감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추측을 바탕으로 판결했다. 검찰은 박명기가 광노현에게 미리 약속을 받고 사퇴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지금까지 적용된 예가 없고, 위헌 소지마저 있는 “사후매수”죄를 적용했다.

이런 판결은 보수 인사를 일색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7월경에 광노현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파와 사법부의 광 교육감 공격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그들은 광노현을 처벌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들의 공격은 진보적 교육개혁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보의 대의와 원칙에 비춰 볼 때 광 교육감은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다.

설사 ‘선’의였다 하더라도 진보진영이 결정한 경선 규칙을 불복하고 이탈한 박명기에게 돈을 건넨 것은 부적절했다. 무엇보다 광노현이 자신을 지지했던 진보진영에게도 쉬쉬하며 은밀한 방식으로 돈을 건넨 것은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기 충분했다. 진보 운동의 오랜 전통에 따라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했으면 이런 잘못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파의 공격에 맞선다는 이유로, 이런 광 교육감의 잘못을 눈감고 그저 한없이 “착한 사람”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광 교육감이 사퇴하지 말자는 부르주아법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진보운동 내부에서 민주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 점에서 광노현 문제를 다른 지난 <레프트21> 기사들은 다소 부적절했다.

우파들의 위선적인 공격을 반대하면서 광노현의 잘못에도 눈감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광노현 사퇴 요구를 과도하게 강조한 것이다. 광 교육감에게 무비판적인 운동진영 내 일부의 태도를 논박하면서 균형각각을 놓쳤던 것이다.

지금 우파는 광노현의 위기를 틈타 진보적인 교육개혁 운동을 공격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상은 더 밝혀야겠지만 최근 법원이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을 구속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벌이는 일이다. 게다가,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교총은 “혁신학교 확대 등 광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나섰다.

진보진영은 우파의 공세에 맞서며 후퇴 없는 교육개혁을 위해 아래로부터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정성영

금방 재개된 우파의 위기와 분열

김문성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가 불안정한 ‘남의 지갑 줍기’였다는 것이 급세 드러나고 있다. 우파 결집을 위해 힘을 합쳤던 ‘이명박근혜’가 위기를 겪고 있고 분합됐던 분열도 재개됐다.

특히, 이명박의 ‘멘토’ 최시중이 불법 자금을 받아 대선 자금으로 썼다고 ‘자폭’한 것이 강력한 파장을 낳고 있다.

현 정권 수립의 핵심 주역이고 내부의 치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레이덕 때문에 국가기구에 대한 통제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이런 균열이 시작됐다는 게 더 치명적일 것이다.

실제로 수사권 문제로 이명박과 틀어진 옛 측근 조현오가 경찰청장 퇴임 인터뷰에서 쌍용차 진압과 경찰 인사에 이명박이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MB 최측근 광승준이 CJ그룹 회장 이재현에게 톨살롱 연예인 성접대를 수차례 받았다는 사실이 터졌다. 이진희·이명희의 아귀다툼은 지배계급 분열상의 깊이를 상징하는 듯하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도 2008년 촛불항쟁의 정당성을 재확인시키며 이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주고 있다.

우파 결집 속에 이명박과의 갈등을 봉합했으나, 대중의 반MB 정서를 감안하며 MB와 차별화해야 하는 박근혜의 모순도 다시 커지고 있다.

성추행과 논문 표절 때문에 김형태와 문대성을 탈당시키는 과정에서 박근혜도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 연말 지지자들에게 “의리가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박근혜가 자신의 언론토보 출신 측근 김형태를 감싸다 역풍을 맞은 것이다.

새누리당 국회 과반 의석은 이미 무너졌고 여기저기서 박근혜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천박의 핵심이라던 유승민마저 “박근혜



몸통들의 동요 최시중의 ‘자폭’ 발언은 권력 핵심 실세들도 통치 위기와 레이덕 속에서 불안과 동요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혜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비판에 동참했다.

이렇게 ‘박근혜 대세론’이 총선 후 열흘 만에 ‘박근혜 한계론’의 도전장을 받기 시작하는 동안,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지금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은] 패배의 길로 간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로는 수도권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발끈한 박근혜 쪽은 김문수가 출마 선언 전 이재오를 만났으며 ‘청와대 음모설’을 제기했다.

결국 <레프트21>의 지난 총선 평가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우파의 분열과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규모로

터져 나오고 있다.

4·11 총선 결과는 실제 사회적 세력 관계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무능을 이용하여 우파를 결집시켜서 과반을 차지했지만, 전국적 득표수에서는 오히려 야권연대 정당들에게 뒤졌다.

시한폭탄

새누리당이 이번에 서울에서 얻은 정당 득표는 오세훈이 서울시장 선거 때 얻은 표보다도 적었다.

그런데도 선거 직후 우파는 자신들이 우세하게 나온 선거 결과를 과장·왜곡

하며, 이를 이용해 정치 지형을 우경화하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북한 위성 발사를 빌미로 안보 위기론을 부각하며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색깔론 마녀사냥을 벌였다.

통합진보당을 고립시키고 민주당을 우경화시키려는 의도였다.

또 영리병원 확대 조치를 강행했고, KTX 민영화도 강행하려 했다. 언론 파업 탄압도 계속했다.

역시나 이번에도 민주당은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영리병원 등에서 거듭 동요하며 우파와 타협해 온 과거를 반복했다.

‘좌클릭해서 중도층을 놓치고 선거에 졌다’거나 새누리당이 강요한 호전적 대북 결의안에 합의하는 식으로 공격에 굴복했다. 그러자 잠시 우파의 시도가 먹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금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선거 결과에 잠시 실망했겠지만,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갔다.

언론 파업 노동자들은 총선 이후 투쟁의 강도를 더 높이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총선 투표도 못 하고 집거에 들어갔던 한일병원 노동자들은 굳건한 집거를 유지해 통과한 승리를 쟁취했다.

이 와중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타격을 받으며 집권당의 분열 위기가 다시 고조된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의제로 대중투쟁을 건설하며 우파의 분열과 위기를 더 가속화시켜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정치적 양극화와 통합진보당의 성장은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 준다.

이런 기대에 부응해 진보의 대안을 발전시키려면, 우파의 ‘엑스맨’ 구실을 하는 민주당을 단호하게 비판하며 독립적 태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터진 비리를 두고 “두 번째 밀물이 밀려 온다”고 한탄했다. 이번에는 그 밀물이 ‘이명박근혜’를 쓸어버리도록 만들어야 한다.

야권연대 강화가 아니라 민주당 비판이 필요하다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 지도부 안팎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더 공고히 추진해 연립정부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민중의 소리>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진영이 가지고 있는 쟁사리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확인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야권연대를 더 강화하고 “공동정부 구성과 정책”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도 “신실하게 평가받으려면 대선 이후까지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전면적 야권연대를 더 강화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도 제대로 못 얹었다. 민주당 집권의 쓰라린 기억과 공천 과정 등에서 드러난 피죄죄함 때문에 진보개혁 대중 상당수가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총선 이후 민주당 내에서 ‘좌클릭’이 문제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우파에 타협·굴종하는 행태를 보면 이들과 무비판적 동맹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민주당과의 ‘묻지마 야권연대’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이 우파와 타협하는 행태를 분명히 비판해야 할 때다. 불가피한 경우 진보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과의 제한적 공조를 할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묻지마 야권연대’를 넘어서 연립정부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

지금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 후보인 멜랑송이 취하는 태도에서 배워야 한다.

멜랑송은 결선 투표에서 우파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사회당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사회당 정부에 동참하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연립정부 추진은 안 된다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과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상 연립정부는 심중팔구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이다. 이미 민주당 정부는 두 차례 집권 경험이 있고, 집권 직후부터 온갖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며 자신의 지지자들과 노동계급을 공격한 바 있다. 바로 이 점이 10년 만에 우파 정부가 반사이익을 통해 재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런 민주당과의 연립정부에 진보정당이 참가한다면 발목이 잡혀 그 정부가 자기 지지 기반을 공격하는 것에 동참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이 중도좌파 연립정부에 참가하면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정책 등에 동조하는 상황으로 빨리 들어간 것은 연립정부 동참의 문제점을 잘 보여 준다.

이처럼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선거 연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공동정부 하에서는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훨씬 더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혁을 이룰 진정한 동력인 노동계급 투쟁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1936년 프랑스 인민전선에 참가한 공산당 지도자 모리스 토레즈는 “투쟁을 시작했으면 끝낼 줄도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 파업 물결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바로 이런 논리로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을 공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좌파는 연립정부 반대를 분명히 하고 힘을 모아서 그런 방향의 사태 전개를 막아야 한다.

최미진

4·11 총선 평가 논쟁

중도층 전인론이 노리는 것

4·11 총선 결과를 두고 ‘좌클릭’한 민주당이 중도층 유권자를 박근혜의 새누리당에게 빼앗겨서 패배했다는 평가들이 많다.

예를 들어, <한겨레21>은 “박 위원장의 진짜 훌륭한 점은 중도층을 지지자로 끌어왔다는 점”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박근혜 비MB 차별화는 기만적인 것이었다. 그는 대중의 표적이 된 일 부만 공천에서 배제했을 뿐, 이명박이 저지른 한미FTA와 4대강, 불법 사찰 등의 앞잡이들을 모두 공천했다.

박근혜가 중도층을 흡수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에서도 맞지 않다. ‘박근혜당’의 과반 확보는 다른 우파 정당들의 지지가 새누리당으로 집중된 결과다.

4년 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전국 정당 비례 득표는 6백42만여 표였다. 여기에 자유선진당과 천박연대 표를 더하면, 우파 3당의 정당 득표는 9백85만 표였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얻은 정당 득표는 9백12만 표였고, 자유선진당을 더하면 9백81만 표다.

반대로 야권연대 정당들의 정당비례 합계나 지역구 득표 합계도 새누리당보다 더 많다.

결과적으로 박근혜는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우파의 여왕’이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박근혜가 선거적 성과를 거둔 것은 민주당의 한계 때문이다.

“김용민 막말 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은 30퍼센트 미만이고, 정권심판론,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은 그 두 배”(〈한겨레21>)였다. 결국, “부동층의 4분의 3가량이 야권 성향인데 이런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한 것”(서강대 서복경 교수)은 민주당의 책임인 것이다.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서 사람들이 진정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김진표는 “왜 중도층을 끌어안는 데 실패했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는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안철수 대망론’도 이런 맥락이었다.

안철수는 비록 기성정치인과 다르다는 이미지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원족이라기보다는 중도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스스로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밝힌 바도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안철수 지지자들이 적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도 그는 광주에 가서 ‘정당보다 인물을 찍어 달라’고 했는데, 누



가 봐도 이는 통합진보당 후보와 겨루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을 돕는 것으로 보였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도 “안(철수) 원장이 야권 대선 경쟁에 합류해야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 성향 표심까지 끌어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가 보여 주는 바는, 민주

당처럼 알맹이와 진정성 없는 진보 시늉으로는 반MB 부동층을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도층을 얻겠다’며 우클릭하면 우파만 더욱 더 유리해질 것이다. 오히려 통합진보당의 상대적 약진에서 진보적 대안을 갈구하는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영남 노동벨트’ 선거 결과 논쟁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등을 돌렸는가

통합진보당이 ‘영남 노동벨트’에서 당선하지 못한 결과를 두고 일부에서는 ‘노동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의 성적을 깎아내린다.

그러나 이런 평가들은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이다.

우선,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수도권에서 진보정당이 교두보를 마련한 것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호남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민주통합당 후보들과 겨뤄 승리한 것도 의미가 있다.

물론 이런 선거적 성과를 낳는 데 기여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야권연대)이 ‘묻지마’ 방식이었기에 여러 정치적 문제를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민주노총의 조직 노동자들이 밀집한 울산, 창원, 거제 등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낙선한 것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일각의 지적처럼 진보정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가 후퇴했기 때문은 아니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밀집한 울산 북구에서 진보정당이 얻은 정당비례 득표수는 18대 총선에 비해 5천6백여 표가 증가했고, 노무현 탄핵 역풍 속에 민주노동당이 최대의 성과를 거뒀던 17대 총선에 전줘도 1천 표가량 증가했다.

진보 후보의 득표수 역시 18대 총선에 비해서는 2만여 표, 17대 총선에 비해서도 9천여 표가량 늘어 역대 최대로 표를 얻었다.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는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가 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한 2009년 재보궐선거에 비해서도 1만 표 넘게 더 얻었다. 울산 동구에서도 진보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계속 늘어 왔고, 이번 선거에서는 17대 총선에 비해 무려 1.5배나 많은 득표를 했다.

진보 분열

따라서 조직 노동자들이 통합진보당 지지를 철회했다는 일부 좌파들의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주된 패인은 전반적 양극화 속에 우파가 결집한 데 비해, 진보는 분열 때문에 효과적으로 표를 결집시키지 못한 데 있다.

창원에서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



‘영남 노동벨트’에서 진보정당 후보들은 대체로 조직 노동자 다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진보의 분열과 우파의 색깔론 공격 등으로 말미암아 우파보다 효과적으로 표를 결집시키지 못했다.

는 5퍼센트 차이로 새누리당 후보에게 졌지만,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가 얻은 표를 합하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었다. 거제에서도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는 불과 3퍼센트 차이로 석패했다. 창원에서는 진보신당 후보가 통합진보당을 새누리당과 비슷하다고 공격하며 후보단일화를 거부했고, 거제에서는 통합진보당이 김한주

후보 지지에 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다.

울산 북구의 경우, 〈동아일보〉등 우파는 국가보안법 구속 전력이 있는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를 ‘종북좌파’라고 마녀사냥하며 우파 결집을 시도했지만, 진보신당 지지자와 일부 좌파들은 우파의 마녀사냥에 맞서 김창현 후보를 방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이 아니라며 선거 막판까지 홍보물 등을 통해 흠집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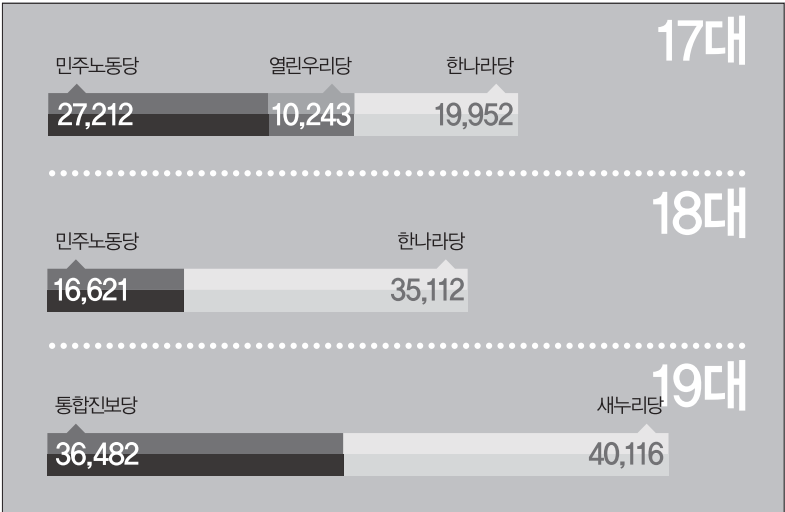
물론 그동안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노동운동 내 반발을 무릅쓰며 참여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묻지마 야권연대’를 추진한 것이 진보의 분열을 자초한 면이 있다.

그러나 ‘진보대통합’ 자체를 사실상 거부한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은 진보가 아니다’라며 선거에서 그 후보에 대한 투표조차 거부한 일부 좌파들의 종파적 태도 역시 문제였다.

선거는 실제 계급 세력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지도 않고, 계급투쟁을 대신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부차적인 선거 문제에서 진보가 굳이 분열하기보다는 단일 진보 후보에 투표해 우파에 맞서며 노동자들의 사기를 북돋고, 노동자가 단결해서 투쟁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 옳았다.

‘묻지마 야권연대’가 투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비판하는 것이, 통합진보당 후보에 대한 비판적 투표조차 거부하는 것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다.

최미진



울산 북구의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추이 울산의 선거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결코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부정 선거 의혹

타락의 조짐?

통합진보당이 비례후보 부정 선거 의혹으로 시끄럽다. 당 지도부는 총선 다음날 곧바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정 선거 시비는 이미 비례후보 선출 직후부터 있었다. 투표 명부 상의 이름과 투표자가 불일치하거나 이중 투표, 대리 투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라인 투표 진행 도중에 소스코드(온라인 투표함)를 열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청년비례 경선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 의혹이다.

한심한 선거 관리 탓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에 의한 의도적 부정 선거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진상조사위는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진보의 도덕성’을 훼손한 이번 의혹을 대충 얼버무리려는 안 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지금 우파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통합진보당을 비난하고 있다.

“부정 선거 유형이나 방식은 북한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새누리당)이라며 색깔론까지 덧씌우고 있다.

물론 최시중 비리가 보여주듯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패 스캔들이 터지는 집권당의 이런 공격은 역겹다.

부패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의 부정 선거 의혹은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통합진보당의 부정 선거 의혹은 근본적으로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 개혁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 있다.

부패와 타락으로 점철된 자본주의에서 정치 체제의 부패는 필연적 경향이다.

이런 체제 자체를 건들지 않은 채 부분적 개혁에 머물다 보면 체제의 타락적 요소가 부지불식간에 스며들게 된다.

브라질 노동자당(PT)도 선거를 통한 위로부터 개혁이 강화되던 1980년대 중반부터 부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4년 대선 당시 부패에 연루된 기업인들한테서 기부금을 받았고, 집권 시절인 2004년에는 투표 조작 비리로 의원 40여 명이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노항래 통합진보당 정책위원장처럼 “과거 노동조합 선거 때의 낡은 관행”과 “운동권적 마인드”가 이번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틀렸다.

오히려 진보정당의 추동력이 아래로부터(노동조합과 부의 축재에 적대적인 개인들 같은) 나올수록, 노동조합이 더 민주적일수록, 부패에 훨씬 더 민감

해진다.

조기 민주노동당이 기성 정치 체제의 부패와 타락에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민감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통합진보당 내에서는 갈수록 선거 승리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부차적이라는 관념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간단히 무시해도 좋다는 당권파들의 스탈린주의 정치가 이런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선거를 통한 위로부터의 개혁에 매진할수록, 종래에 자본가 정당한 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치달을수록, 그 당 내에서 부패 차단 위한 균형추가 약화될 위험성이 크다.

김재현

좌파의 올바른 개입을 위해

1퍼센트만을 대변하는 부패한 우파 정부가 심각한 위기와 분열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며 각종 개악을 지속하는 현재 상황은 급진적 투사들에게 갑갑함을 느끼게 한다.

끝없이 동요하며 우파와 타협하는 민주통합당이 우파 정권의 가장 큰 버팀목이 돼 왔다. 그래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중투쟁을 건설하기보다는,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묻지마 야권연대’에 치중해 온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개혁주의 지도자들도 현 상황에 큰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일부 급진좌파들도 이런 상황을 타개할 능력과 자세를 보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급진좌파들은 우파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자본가 계급과 체제의 이익을 대변하는 못된 세력이라는 옳은 주장을 해 왔다.

그리고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계급타협 전략에 맞서 아래로부터 투쟁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단지 반MB만이 아니라 반자본주의적 관점과 사회주의적 대안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맞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운동 속에 개입해서 요령있게 이런 주장을 펼치며 운동에 영향력을 미치려 하기보다 스스로 벽을 쌓는 종파적 태도가 일부 급진좌파를 주변화시켜 왔다.

예컨대 일부 급진좌파들은 민주노총의 조직 노동자 다수가 지지하는 통합진보당을 ‘진보도 아니고 운동의 걸림돌’이라고 취급하면서, 그런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함께 운동을 건설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다.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그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것조차 반대했다. ‘희망광장’ 등 자신들이 주도하는 운동에 통합진보당 등 개혁주의자들을 끌어들이려 하지 않았고, 집회에서 통합진보당 인사가 발언할 때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자신감

그러나 소수 혁명가들이 선전과 폭로를 한다고 해서 노동자 대중이 곧바로 개혁주의 정당의 한계를 깨닫고 혁명가를 편으로 몰려 오는 것은 아니다. 대중은 투쟁과 승리의 경험 속에서 낡은 사회적 편견을 떨치며 더 급진적인 사상과 조직에 함께할 자신감을 얻는 법이다.

이런 자신감과 각성의 깊이와 폭은 투쟁의 규모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진정한 혁명가는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 등 개혁주의 단체들을 비판할 뿐 아니라 지지와 협력도 하면서 더 큰 대중행동을 건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에서만 최대 1백만 명까지 참가했던 촛불항쟁을 주도했던 것은 개혁주의 단체와 NGO 등이었다. 당시 다함께는 이 때문에 이 운동에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이 더 급진적이고 투쟁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개입했다.

반면 일부 급진좌파들은 개혁주의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에만 주력하면서 막상 투쟁 건설에 소홀한 태도를 보인다. 예컨대 일부 좌파들은 올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등에서 통합진보당 지지 방침 통과를 막는데 신경을 집중했다.

그렇면서 막상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 계획을 강화하거나, 언론 파업을 엄호하는 연대 파업 건설 제안 등에는 그다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진정한 좌파에게 투쟁보다 훨씬 부차적이어야 할 선거 방침 문제에 매달리다가 막상 투쟁 건설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다.

일부 급진좌파들의 소파권주의도 문제다. 이들은 개혁주의 단체들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막상 자신들이 주도하는 운동에서는 의견이 다른 세력의 제안이나 주장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척하곤 한다. 자신들이 다 만들어 놓은 계획과 틀을 받아들이라는 식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투쟁을 활성화하고 더 급진적인 대안을 발전시키려면 이런 약점들을 극복해야 한다. 진정한 좌파는 진보진영과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주장과 정책이 옳바른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야 한다.

확고한 혁명적 원칙과 정치적·조직적 독립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유연한 전술을 통해 대중운동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사회주의자가 돼야 한다.

김문성·전지윤

북한 위성 발사 이후

굳건한 반제국주의 관점이 중요하다

김영익

4월 13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실패한 후, 오바마 정부는 이번 발사를 “도발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내게 했다. 이명박 정부도 미국의 북한 때리기에 가세했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1만 기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서 북한을 수십 년 동안 위협해 왔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필요한 인도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 성공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위선적 태도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북한 위성 발사라는 결과를 낳은 원인 제공자들이다. 1990년대 초부터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미국이 북한을 무시하고 압박한 게 진정한 문제였다.

비록 이번 위성 발사 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당국과 2·29합의를 했지만, 미국 대선 전까지 북핵 문제를 현 상태에서 동결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북한 위협론을 통해 이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MD 체제 강화 등 북한을 발미로 중국을 봉쇄하는 조처들을 이행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한·미·일이 강경대응에 나선다면, 북한의 핵실험이나 위성 재발사를 부르며 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북한을 두고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 이야말로 ‘도발 행위’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자며 북풍몰이에 앞장섰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북풍몰이를 하는 것은 국내 이데올로기 지형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우파를 결집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민주통합당은 역시나 이런 우파의 공세에 타협하고 있다. 사실 4월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채택된 위선적인 대북 규탄 결의안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민주당은 비슷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도 채택하자는 박근혜의 제안에도 서둘러 동의했다.

이런 행태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대결적 남북관계를 종식시켰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보여 준다.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자유주의 언론들도 제국주의 압박보다 북한의 대

응을 더 문제 삼는 비슷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주의 언론들의 이런 입장은 우파의 정국 주도권만 더 강화시켜 줄 뿐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우파의 의도를 폭로하고,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특히 우파에게 타협하는 민주당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성격

진보진영은 분명한 반제국주의적 관점에서 현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그 동맹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우파에게 공격받는 통합진보당도 방어해야 한다.

그 점에서 진보신당이 “일방적인 군사적 모험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현 상황의 주된 책임이 마치 북한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부적절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과 심상정 공동대표도 당의 공식 입장과 달리 다소 양비론적인 관점을 밝히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물론 진정한 진보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도 지지할 수 없고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제국주의 최강대국 미국의 선제 공격 위협과, 이에 맞서 가난한 독재 국가가 무장을 강화하는 것을 동등하게 비판하는 것은 이 문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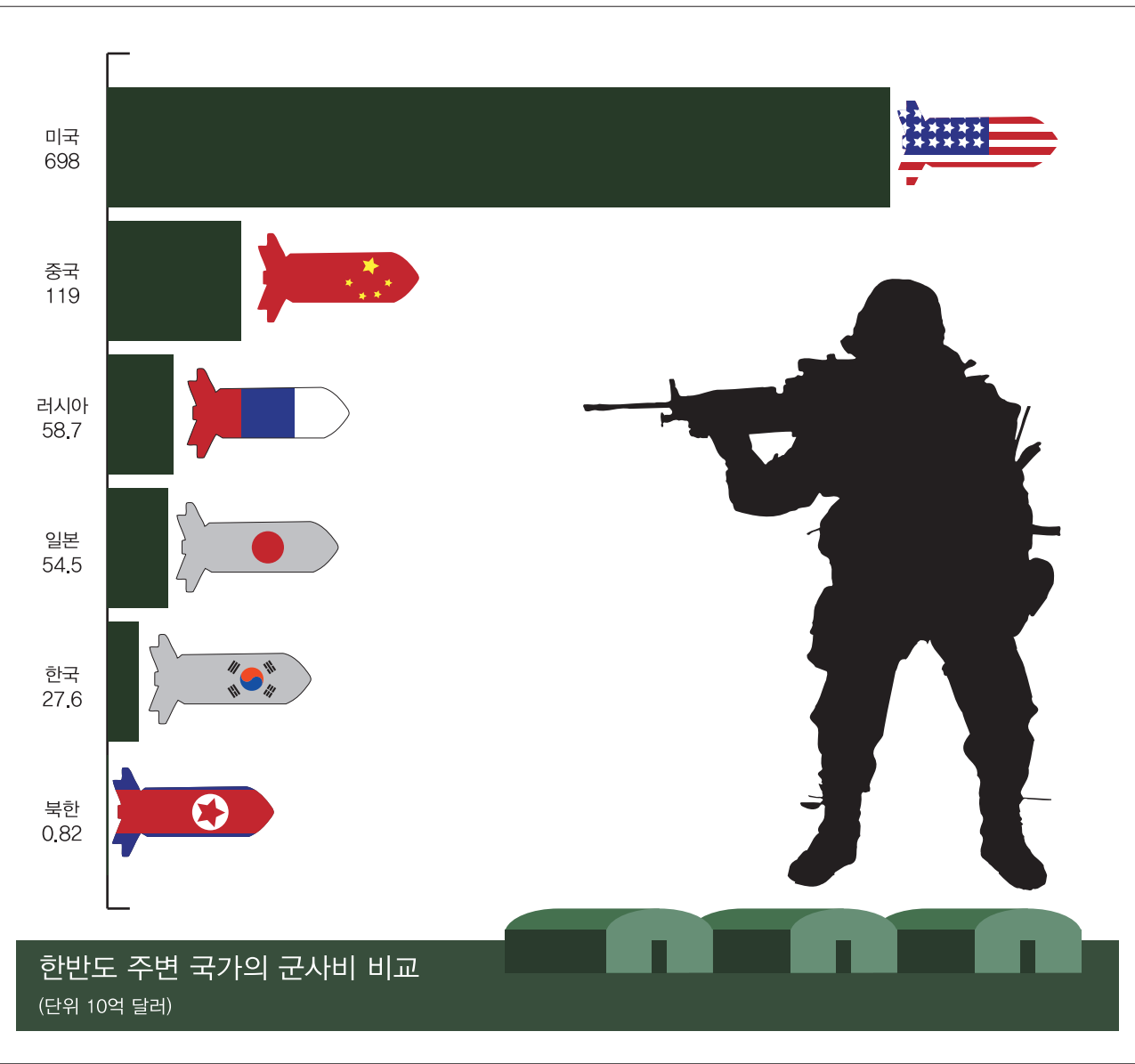
진보진영은 우파의 북풍몰이와 색깔론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반제국주의 입장에 서야 한다.

북한의 강경한 맞대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명박과 남한 우파를 비난하면서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도 … 그 모든 것을 날려 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호전적 성명을 냈다. 이후에도 북한 당국은 여러 차례 비슷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에 대한 맞대응일 것이다. 앞서 이명박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반격한다”는 등 호전적 발언을 쏟아내고, 국방부가 최신 미사일들을 공개하는 등의 행동이 북한의 이런 대응을 촉발시켰다. 남한에 대한 공격 위협을 통해 미국에게 북미 간 협상의 필요성을 보여 주려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쌓이면



압도적 군사력으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키우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맞서는 게 중요하다.

수차례의 서해 교전과 연평도 포격 사태 때처럼 돌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북한 당국의 연사는 단지 이명박과 남한 우파뿐만 아니라 남한에 살고 있는 노동자·민중에게도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수많은 노동자·민중이 살고 있는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고 “초도화”하겠다는 것은 반제국주의나 사회주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그 동맹국의 압박에 북한 관료들이 이처럼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노동자·민중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북한 관료들은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핵개발 등 군사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 이를 위해 인민 생활에 필요한 분야는 희생돼야 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에 많은 자원을 쏟아붓는 한, 북한 인민이 이른바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누리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가자본주의

물론 이를 두고 이명박과 오바마가 ‘인민이 굶주리는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북한 당국을 비난하는 것은 역겹기 짝이 없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과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 관료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채찍질한 것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위기로 미국 대중이 힘겨워하는데도,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 군비지출액의 무려 4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명박도 초등학교 급식에 돈 쓰는 건 아까워해도 차기 전투기 사업 등 14조 원짜리 무기 수입에 돈을 펍펍 쓰고 있다.

물론 미국과 남한 지배자들의 위선을 옹호하면서도, 북한 관료들의 행태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 국가관료들이 군사력 강화를 위한 축적에 인민의 진정한 필요를 희생시키는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일 뿐이다. 좌파는 제국주의 압박에 우선적으로 반대하면서, 북한 체제의 진실을 파헤치고 비판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남한 우파의 위선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우파가 사회주의를 소름끼치는 독재로 몰면서, 진보의 대안에 흠집을 내는 것도 막아낼 수 있다.

‘종북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총선 이후에도 조중동을 중심으로 ‘종북좌파’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동아일보〉는 ‘없어진 줄 알았던 민혁당, 민노당 이어 통진당까지 장악’이라는 기사에서 “과거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한 ‘민혁당 잔존 세력’들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은 [북한 위성] 북한 당국처럼 ‘광명성 3호’라고 부르고 있다”며 색깔론을 부추겼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안당국은 ‘김정일의 말을 급훈으로 삼았다’며 한 전교조 교사를 문제 삼았다. 또, 민주노동자전국회의의 부산지부가 5년 전 작성한 문건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우파는 통합진보당이 북한 위성 발사를 나무라기는커녕 “제재 일변도 방식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하고 옹호했다는 것을 ‘종북’의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동아시아를 불안정에 빠뜨리는 진정한 원인을 문제 삼은 것은 비난받을 게 아니다.

지금껏 우파가 내세운 ‘종북’의 근거들은 ‘한미 동맹 해체, 한미 FTA 폐기,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처럼 모두 진보운동의 정당한 요구들이다.

사실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묻지마’ 야

권연대를 추진하며 이런 요구들을 일관되게 주장하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였다.

통합진보당의 일부 지도부를 비롯한 NL 세력들이 북한의 꼭두각시인 양 묘사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꼭두각시?

NL 세력은 지금껏 국가 탄압을 견뎌가며 남한 지배계급에 맞서 싸워 왔고 남한 피억압 계급에 뿌리내렸다.

예컨대, 이번에 당선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민주노총 상근자로 노동운동에 몸담았고, 2000년대 후반 이랜드 노동자 투쟁과 기흥전자 투

쟁에 앞장서 연대했다.

NL 세력이 북한을 사회주의라 여기는 스탈린주의 정치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 당국의 입장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북한 정부는 2006년 남한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의 패배를 위해 열린우리당에 투표하라고 했지만 민주노동당 내 NL 세력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물론 NL 세력이 북한의 3대 세습 등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진보진영은 미국의 대북 압박을 분명히 반대하면서도 북한 당국의 비민주적 억압 통치를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 대한 이런 혼란은

토론할 문제지 탄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보수 세력은 진보 세력에 ‘종북’ 딱지를 붙이고, 안보 위기를 부추겨 사회 분열을 우경화시키려고 한다. 진보진영의 분열도 노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최근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심상정, 노회찬 의원의 말을 부각해 보도했고, “종북 2라운드” 운운하며 분열을 부추겼다. 이런 보수 세력의 분열 조장에 진보진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난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때 일부 ‘평등파’들이 ‘종북’을 문제 삼으며 우파 논리에 타협했던 과오가 반복돼선 안 된다.

이현주



3월 29일 마드리드 시내를 가득 메운 노동자 파업 행진 계급투쟁의 판돈이 커지고 있다.

그리스보다 5배나 큰 스페인의 위기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스페인 위기에 대해 말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올 여름 한국에서 열리는 맑시즘 2012에서 유럽의 긴축과 저항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바로 얼마 전 세계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논평을 썼다. <레프트21> 78호)이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스페인이 ‘그리스식’ 위기로 나가기 시작했다.

부활절 이후 스페인 국채 금리가 6퍼센트로 치솟았다.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에 금융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금리 인상에 불을 댕겼다. 스페인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는 이런 소문을 강력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 지배자들은 유럽 채권 시장이 스페인 문제로 혼란에 휩싸인 것에 화가 나 있었다. 지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표단이 스페인 예산을 심사하려고 수도 마드리드로 파견되고 있다.

그리스의 최근 경제 문제를 지켜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들은 매우 익숙한 이야기다.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의 어떠한 ‘지원’도 필요 없다고 수없이 재확인했다.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만약 스페인이 그리스의 길을 따른다면, 이 위기는 우리가 앞서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위기가 될 것이다. 스페인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는 긴축과 침체의 악순환은 지금 훨씬 더 악화됐다. ‘그리스 비극’이 시작됐을 때, 위기는 그리스에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웠다. 일부는 잠깐 고통을 견디면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를 위기에서 구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틀렸다는 게 입증됐다. 그런데 스페인 경제는 훨씬 더 크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합친 것의 두 배에 이른다.

악화

게다가 스페인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1퍼센트 금리로 값싼 대출을 받아 이 자금을 대규모로 사용한 첫 사례다. 이른바 “장기대출프로그램 [장기 재금융화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1월부터 1조 유로를 유럽은행들에게 제공했다. 이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겉으

로는 잠잠해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서 ‘좀비 은행’들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누구도 이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자산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긴축정책과 침체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대출한 자금이 점점 더 “부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직장을 잃거나 임금이 삭감된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 정부의 세수가 떨어지면 적자를 메우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 위기만 스페인에서 더 커다란 규모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 위기 역시 마찬가지다. 라호이 우파 정부가 집권한 지 채 두어 달이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벌써 라호이 우파 정부는 최근 안달루시아 지방선거에서 표가 좌파로 크게 이동하면서 타격을 받았다. 선거 당일 저녁 스페인 금융장관 크리스토폴 몬토로는 선거 결과 때문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유럽연합 관료들은 곧 스페인 정부

가 약속했던 긴축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급진화는 선거를 넘어서 계속되고 있다. 2주 전에 있었던 스페인 총파업은 “그리스 활력”이 투쟁 영역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준 증거였다. 그리고 이 활력은 단지 스페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4월 16일 이탈리아에서는 새 노동법 개악에 맞서 노동자 수십만 명이 파업을 벌였다. CGIL, ISL, UIL 세 노동조합총연맹이 파업에 동참했다. 노동법 개악은 사장들이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압력을 받은 이탈리아 정부는 벌써 양보 조치를 취해야 했다.

국제적인 점거 운동이 시작됐던 스페인에 강력한 파업 운동이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유럽 지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흥분되는 발전이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계속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299호 / 번역 최용찬

이집트 대선

기रो에 선 무슬림 형제단

앤 알렉산더 영국 사회주의자, 중동 전문가

4월 13일 수많은 시위대가 타흐리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무슬림형제단과 여러 이슬람주의 정치 세력의 지지자였다.

고작 두 달 전 무슬림형제단 의원들은 좌파와 진보진영의 혁명가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과정의 우여곡절 탓에 무슬림형제단은 타흐리르 광장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달 초, 무슬림형제단 지도자들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던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무슬림형제단은 억만장자인 하이라트 알샤테르를 후보로 내세우고, 무바라크 정권이 “재탄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방침을 바꿨노라고 주장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자유정의당의 지도자 모함메드 모르시 또한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그사이 무바라크 정권에서 고문과 폭력을 자행하는 데 앞장섰던 오마르 술레이만이 입후보해 세를 넓혀 갔다.

갑작스레

전직 외무장관 아무르 무사나 전직 총리 아흐마드 사피크같이 무바라크 정권에서 한자리했던 사람들도 후보로 나섰다.

무슬림형제단이 갑작스레 선거와 관련한 태도를 바꾸면서 그 지도자들은 가두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고,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집권 세력인 군부와 무슬림형제단 사이의 관계가 긴장과 불안정 탓에 빼적대자 둘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하고 있다.

군부 편에서 보자면 무슬림형제단한테 선거 참여를 허용한 것은 대중이 두려워서 취한 양보일 뿐이다.

무슬림형제단 지도자들 또한 자신에게 권력을 쥐여 준 민중 혁명을 두려워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서 옛 정권 핵심 세력의 도움을 받아 민중 혁명을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군들이 혁명가들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무슬림형제단이 해 온 안전판 구실은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무슬림형제단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지켜 낼 만큼 국가기구 내에 충분한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지금 하이라트 알샤테르와 군부 지도자 탄타위 장군은 혁명이 사회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막고자 동맹을 맺고 있다.

군부의 돈벌레들과 무슬림형제단의 억만장자들은 필사적으로 파업의 고삐를 죄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는 노동자들과 빈민들을 상대하는 골치 아픈 일에 약간의 대중적 정당성을 부여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성명은, 군부와 이슬람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세운 “민주주의”의 형태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지만, 평범한 이집트 사람들을 계속 착취하는 데는 뜻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 성명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한다. “지금은 집권 세력이 의회와 대통령 자리를 두고 다투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그들이 만약 협상을 타결하고 자신의 정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일에 적극 나서게 되면 그것은 우리 혁명의 죽음을 의미할 것이다.”

혁명가들이 맞닥뜨린 핵심 과제는 선거 공간과 가두 정치, 작업장의 투쟁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군부와 무슬림형제단 동맹을 저지할지 답하는 것이다.

[이집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술레이만과 알샤테르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지금까지 10명의 후보자격을 박탈해 아직까지 최종 대선 후보 명단이 결정되지 않았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299호 / 번역 정중수

사르코지 덕에 극우가 커졌지만 좌파도 전진하다

파리에서 짐 올프리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파시스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에 대한 지지가 급증했다. 르펜은 출구조사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29퍼센트)와 우파 현직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27퍼센트)에 이어 18퍼센트의 지지를 받아 3위를 차지했다. 국민전선에 대한 지지는 2007년 10퍼센트에서 크게 상승했고, 약 6백50만 표를 획득해 프랑스 극우 역사상 가장 큰 지지를 획득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주류 논평가들은 마린 르펜이 만든 “부드러운” 이미지가 국민전선이 더 온건해진 증거라고 말한다.

이 주장은 틀렸다. 르펜이 국민전선의 대중적 이미지에 화장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자칭 ‘혁명적 민족주의자들’은 항상 파시즘을 현재 상황에 걸맞게 적용하려 해 왔다. 르펜은 여전히 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사르코지가 “국가 정체성”에 집착하면서 국민전선이 그 주된 수혜자가 됐다. 사르코지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긴축정책과 어처구니없이 “불링불링한(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현대 프랑스 대통령 중에서 가장 무자비한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추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자수를 할당해 무자비하게 실행에 옮겼다. 로마[집시]들의 거주지가 파괴됐고, 프랑스의 무슬림들에 대한 잔인하고 지속적인 공격이 진행됐다.

프랑스 국가는 공공장소에서 니갑 착용을 금지하고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불법화해 무슬림들이 무엇을 입고 어디서 기도를 드려야 할지 법으로 정했다.

사르코지 선거 운동의 특징은 르펜을 쫓아 할랄[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고기와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이슬람 혐오는 국민전선을 정당화했다. 그래서 백만장자의 딸, 마린 르펜이 “엘리트”와 그들의 긴축 정책에 맞서는 것처럼 쉽게 가면을 쓸 수 있었다. 르펜은 국민전선이 “극단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좌파에 맞서는 유일한 반대파”라고 주장했다.

이제 사르코지와 올랑드가 5월 6일 결선에서 맞붙는다. 여론조사는 올랑드가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전선에 대한 지지는 충격이지만, 좌파도 1988년 이후 대선 1차 투표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획득했다. 좌파에 대한 지지는 올랑드의 “공정한 긴축” 프로그램과 좌파전선의 장뤼크 멜랑송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 멜랑송이 내놓은 부의 재분배와 생태계 회복이라는 제안은 11퍼센트의 지지를 얻었고, 1.2퍼센트가 반자본주의신당(NPA)에 투표했다.

멜랑송은 유럽 긴축정책의 중심에 있는 사르코지·메르켈 동맹이 반드시 파괴돼야 한다고 옹계 주장한다. 따라서 좌파는 결선에서 사르코지가 반드시 패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급진 좌파에 대한 지지는 비록 예상보다 낮았지만 긴축에 맞선 대안에 대해 상당한 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선에서 누가 승리하건 사장들의 공격이 뒤따를 것이다. 이에 맞선 투쟁은 단결을



사진 출처: Philippe Boyer (블리카)

프랑스 이주민 강제 추방 반대 집회 국민전선은 사르코지의 무자비한 인종차별주의 정책의 주된 수혜자가 됐다.

최대화해 산업 투쟁과 정치 투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좌파들은 인종차별적인 이슬람 혐오와 국민전선에 능동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지금까지 이 투쟁을 벌이는 데 실패한 결과를 지금 우리 모두가 보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 위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민전선을 패배시킬 수 있다. 1990년대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파시스트 조직에 대한 “민주적 공격” 운동을 건설했다. 이 운동은 국민전선에 타격을 가해 당을 분열시켰고, 국민전선은 최근 여야 그 타격에서 회복할 수 있었다.

선거 바로 전날, 멜랑송은 르펜을 “프랑스 정치의 끔찍한 괴물”이자 “학살의 길을 놓는 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멜랑

송보다 르펜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인민전선보다 히틀러가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비교했다.

이 비교는 올바르다. 과제는 올바른 주장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짐 올프리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당원이고,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에서 프랑스 정치사를 가르치고 있다.

좌파가 르펜에 맞선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세드릭 픽토로프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활동가

마린 르펜 중심의 국민전선 지도부는 파시스트 이미지를 불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전략을 도입하고 국민전선의 파시스트 역사와 가장 크게 연관된 요소들이 당에서 하는 구실을 줄이려는 내부 투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국민전선과 그 지도부는 전통적인 골수 나치다. 국민전선은 은밀하게 의회 밖 폭력 단체와 연관을 맺고 있고 좌파에 대한 폭력에 개입해 왔다.

선거 바로 이틀 전,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전선 후보 중 한 명이 좌파전선의 포스터를 부착하던 사람을 폭행했다.

“온건” 이미지와 골수 파시스트 사이의 긴장으로 국민전선은 모순에 처해 있다. 국민전선은 새로운 청중들을 끌어들이려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지자들을 과격하게 만들어 골수 파시스트로 조직해야 한다.

마린 르펜의 아버지는 국민전선의 전 지도자 장 마리 르펜이다. 그는 바로 지난해에 나치 협력자로 유대인 학살을 주장한 작가 로버트 브라지아크를 찬양했다.

반면 그의 딸은 “온건”한 역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다. 파시스트 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을 뿐이다.



사진 출처: Gregoire Lannoy (블리카)

12만 명이 모인 급진 좌파 멜랑송 지지 집회 급진 좌파가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한다면, 국민전선의 대중적 파시스트 운동 건설을 막을 수 있다.

국민전선의 득표율은 2002년 득표율과 비슷하다. 하지만 득표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정치 상황이 달라졌다. 2002년에는 수십만 명이 나치에 반대해 거리를 점거했다.

지금 국민전선은 [기성 정치 내부에서]

이전보다 더 커다란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주류 정치 담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데 있다. “국가 정체성” 사상을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합의가 발전해 왔다.

우파의 주도 아래 세속주의로 정당화

된 인종차별주의와 이슬람 혐오가 커졌다. 그런데 많은 좌파들도 이런 형태의 인종차별주의와 이슬람 혐오를 지지해 왔다. 지난해, 의회 좌파들이 상원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이 통과시킨 첫째 법안은 무슬림 어머니가 히잡을 착용하고 학교에 방문을 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운동을 건설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사르코지 정부의 내부장관 클로드 게앙이 몇 년 전 인종차별적 연설을 했을 때 곧바로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지금은 이런 시위를 조직하는 게 훨씬 어렵고 심지어 급진 좌파 내에도 존재하는 이슬람 혐오는 운동 건설에 실질적인 제약이 되고 있다.

운동

그리고 국민전선의 파시스트적 특수성에 대해서도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이슬람 혐오에 맞서고자 하는 반인종차별주의 좌파들도 파시즘에 맞서 투쟁할 의지가 줄어들었다.

많은 이들이 국민전선이 변했기 때문에 단지 또 다른 인종차별주의 정당일 뿐, 더는 파시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또 다른 생각을 낳는데, 국민전선에 맞서 거리에서 투쟁할 것이 아니라 오직 공식 정치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전선의 선거운동에 맞서 4월 19일 파리에서 열린 집회에 단지 3백 명이 참가했다.

국민전선의 특수성을 인식하는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와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파시즘과 보수 우파가 구별되는 것은 파시즘은 대중운동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국민전선은 자신들이 대선에서 획득한 정당성을 활용해 오는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이 의석들을 도구로 삼아 파시스트 조직을 건설하려고 한다.

국민전선은 인종차별주의, 국가주의, 동성애 혐오, 여성차별주의 같은 반혁명적 사상을 중심으로 한 행동대들의 기반을 건설하려고 지역에 뿌리내리려 한다.

선거가 끝나면, 국민전선은 파시스트 운동을 건설하려고 우리가 전에 봤던 것과 똑같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전선의 전략이 갖는 모순들은 또한 국민전선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나치는 행동대들을 전통적인 골수 파시스트로 양성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이미지를 ‘온건’하게 보이도록 노력해 선거에서 새로운 지지를 획득하려고 했다.

좌파, 특히 급진 좌파가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운동을 건설한다면, 골수 파시스트를 고립시키고 국민전선이 대중적 파시스트 운동을 건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300호 / 번역 최용찬

KTX 민영화 저지 투쟁

지배자들의 내분을 이용하며 투쟁을 발전시키자

이명박 정부가 4월 19일에 KTX 민영화 ‘사업 제안 요청서’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애초에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던 부분을 삭제했다.

“시기를 못 보는 것은 적절치 않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런 후퇴는 70퍼센트가량의 반대 여론과 철도노조의 파업 추진도 고려한 것이겠지만, 무엇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반발 때문인 듯하다.

총선 전부터 “서두를 일이 아니다”던 박근혜는 “지금과 같은 KTX 민영화의 반대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한국처럼 국가자본주의의 유산이 강한 나라에서는 민영화 추진을 두고 지배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기 쉽다.

특히 민영화 때문에 이권을 잃을 수 있는 국가·공기업 관료들이 반발하며 압력을 미치는 것이다. 관료들은 흔히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향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

실제로 이명박은 KTX 민영화를 방해하는 철도공사 경영진과 국토부 철도 담당 국장을 잡아 치우고 나서야 민영화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철도공사 부사장은 이번 총선 때 일부 후보들을 만나 KTX 민영화에 반대하라고 설득하고 다녔다고 한다.

박근혜는 대선을 앞두고 관료 등 일부 지배자들의 반발까지 사며 KTX 민영화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게다가 박근혜는 선거를 고려해 인기 없는 이명박과 선을 그을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와 새누리당조차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지만, KTX 민영화 추진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새누리당의 주도권은 박근혜에게 넘어갔지만, 행정부의 주도권은 여전히 이명박에게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올 하반기에 KTX 민영화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상급까지 걸고 민영화를 포장하는 새 이름을 공모하며 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가 시기와 방법을 문제삼을 뿐, 철도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계급을 더욱 쥐어짜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KTX 민영화의 연내 추진이 물 건너갔다며 순종고 있어서는 안 된다.

철도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 조합원 93퍼센트가 참가해 86퍼센트라는 높은 찬성율이 나온 것은 좋은 출발이다. 이를 바탕으로 철도 여객과 화물 운송을 멈추는 실질적인 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사회 전반에 누적된 반재벌·반신자유주의의 정서와 결합하면서, 언론 파업,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화물연대 투쟁, 민주노총 파업 등과 연결된 정치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홍보 여론전을 벌이는 만큼, 반대 여론을 모으는 대중적 반대 서명 운동도 계속해야 한다.

우리가 단호하게 싸울 때 지배계급의 내부 분열이 더 격화하면서 승리를 앞당길 수 있다.

계속되는 정부의 거짓말

이명박 정부는 KTX 민영화 ‘사업 제안 요청서’ 정부안을 발표하며 민영화에 관한 거짓말들을 또다시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 특혜’라는 비판을 파하려고 대기업 등 최대주주 지분을 49퍼센트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눈에 보이는 꼼수일 뿐이다. 지분 49퍼센트면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대주주가 지분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또, KTX를 민영화하면 요금이 인하된다고 떠들썩하게 선전하고 있다.

‘철도공사 요금의 90퍼센트 이하 책정’을 계약 의무사항으로 하고, 경쟁을 통해 최대 85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눈속임이다. 철도 요금은 운행거리에 따라 정해지는데, 수서발 KTX는 서울역·용산역발보다 노선이 짧아 가격이 원래 10퍼센트 정도 싸야 한다.

게다가 철도공사는 이미 KTX 요금을 20퍼센트 가까이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민간 회사는 KTX 기본운임을 낮춘다고 발표하고서, 철도공사가 이미 실행 중인 다양한 할인을 없애거나, 할인율을 낮추거나, 요금이 비싼 특실을 늘리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지하철 9호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에 요금을 대폭 올릴 수도 있다.



광범한 정치적 투쟁을 건설할 때, 지배자들의 내분을 격화시키고 KTX 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다.

9호선이 보여 준 민영화의 미래

4월 14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은 요금을 최대 5백 원 인상하겠다고 공고했다. 지난 2월 1백50원을 올린 데 이어 또 5백 원을 올린다면 몇 달 새 9백 원에서 1천5백50원으로 폭등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영화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에 추진되면서 온갖 특혜를 제공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는 맥퀀리인프라인데, 맥퀀리IMM자산운역 대표가 이명박의 친형인 국회의원 이상득의 아들 이지형이었다.

민간 자본은 9호선의 총공사비 중 3분의 1만 투자했지만 운영권과 요금결정권을 받았다. 명균 노동시간은 1.2퍼센트 줄어든 반면, 생산성은 7.6퍼센트나 늘었다.

그러나 이명박은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 2014년까지 8백만 대를 생산(올해 7백만 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쪽에선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 노동과 실업을 시달리고 있는데, 왜 가뜰이나 일이 많은 노동자들이 더한층의 고강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가. 대규모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신규 채용이라는 대안을 내놓고 말이다.

다른 한편, 일각에선 ‘어느 정도의 임금 삭감을 감내하라’는 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에도 노회찬, 김유선, 박태주 등 노동운동의 주요 인사들은 임금 삭감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장시간 노동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고임금을 고집하는 게 문제’라는 지배자들의 역겨운 논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민영화의 패배는 9호선만이 아니다. 지난해 개통한 신분당선 역시 요금이 일반 지하철보다 5백50원이나 비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호선 요금 폭탄에 맞서 “사장 해임과 사업자 지정 취소, 매일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본의 이윤 추구에 반대하는 박원순 시장의 이런 행보는 반갑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계약 준수가 기본인 사회에서 계약 변경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며 서울메트로9호선

을 옹호하고 있다. 이것은 부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등지는 것은 ‘계약 준수’고, 부자들의 횡포에 반대하는 것은 ‘계약 변경’이라는 말일 뿐이다.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를 순순히 따르다면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 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

민영화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우리는 박원순 시장에게 9호선을 공영화해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강동훈

한일병원 일반노조 송영옥 분회장 인터뷰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들이 1백9일간 투쟁 끝에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이 중년의 여성 노동자들은 식발을 하고 음식을 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로비 점거 농성을 하며 끈질기게 투쟁했고, 그 결과 쟁취한 승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고 있다.

투쟁을 이끈 한일병원 일반노조 송영옥 분회장을 인터뷰했다.

지난해 작년 7월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는데, 노동조합에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처음에는 노동조합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일하고 집에 들어와 살림이나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조건이 너무 열악했어요.

예를 들어 고무장갑 같은 필수품도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각자 사서 썼습니다. 위생 신발도 도저히 신을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요.

한 동료는 수술을 해서 일을 못 나갔는데 바로 해고됐어요. 너무 억울해서 노동청에 알아봤는데 결국 부당하고 판결을 받았어요. 산재처리에 수습비와 입원비도 받아내고, 월급도 받는 등 많은 것을 얻어냈어요. 그걸 보고 동료 1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어요. 그 후 몇 년 치 미지급된 수당도 받고, 물품지급도 잡됐어요.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가입했나 생각했습니다.

4월 11일 1차로 침탈되고, 조합원 분들만 병원에 남았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그때 우리는 전혀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병원 측에서 노조 탈퇴하면 복직된다는 회유를 했지만 그럴수록 단결이 더 잡됐어요. 그전에 삭발까지 했는데 그때 이후로 토틸 못칠 수 있었습니다. 쫓겨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뿔뿔 찢어 먹었어요. 그전에 삭발까지 했는데 그때 이후로 토틸 못칠 수 있었습니다. 쫓겨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뿔뿔 찢어 먹었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해고됐을 때 심경이 어땠나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적어도 계약해지 두 달 전에라도 말해 줬으면, 우리도 다른 곳을 알아봤을 거예요. 불과 이틀 전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통보됐는데 황당하고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13년

동안 일해 왔는데 당연히 고용승계가 된다고 생각하고 해고 전날인 12월 31일까지 연장근무 했어요. 그래도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1월 1일 해고된 걸 알고 바로 통칠 수 있었어요.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당이 되면 해고 문제가 해결될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선거 바로 전날 로비로 들어가 시게 됐나요?

사실 기대를 많이 하긴 했어요.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 분들이 많이 연대해 주시기도 하였고요. 선거에 참여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쉽기는 했고, 선거 때문에 이송화가 안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선거 전날 경찰이 함부로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로비에 들어가기 전까지 1백 일 넘게 안 해본 게 없는데 해결되지 못해서 너무 억울했어요.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라는 생각이었죠.

특히 대학생들의 연대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이제는 소위 명문대를 나와도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는 세상인데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많이 와 줬어요. 또 병원 측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싸움이 라고 노노갈등을 부추겼는데 한국노총 소속인 한진KDN 노동조합에서 연대해줬을 때 고마웠고 잘 해결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싸우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우리가 투쟁할 때는 앞이 잘 안 보이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터널은 앞으로 나가다 보면 언젠가 빛이 보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해도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투쟁하는 당사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야지만 연대도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우리도 해결된 것처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사회가 더 좋아질 겁니다.

열심히 투쟁한 만큼,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용역회사 노동자들을 잘 어루만질 것 같아요 … (웃음)

또 연대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점점 늘

인터뷰·정리 김석진



빨랫줄로 몸을 묶고 점거 농성에 나선 한일병원 노동자들 끈질기게 투쟁해 승리한 여성 노동자들의 놀라운 투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KTX 민영화: 재앙의 신호탄

정적적 분석과 투쟁 방향

새로 나왔습니다.

강동훈 외 지음 / 다함께 / 3천 원 구입 문의: 02-2271-2395

주간연속2교대제

생산량 보전, 임금 삭감 없이 심야노동을 없애자

최근 정치권이 너도나도 장시간 노동 실태를 개선하자고 말한다.정부가 민간 대기업의 노동 실태를 비판한 데 이어, 민

주통합당뿐 아니라 새누리당도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자 경총이 정부 방침에 반발했고, 대한상공회의소도 정치권의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본질적인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선 안 된다. “차량 한 대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철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물리적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지는 게 그동안 총자본이 추구해 온 방향이다.

이미 2008년에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열위”를 지적하며, 효율적 근무시스템 구축과 유연근무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 등 주요 재벌들도 장기적 이익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방향을 무조건 배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초 현대차 사측이 제시한 ‘장시간 근로 개선안’을 치켜세운 바 있다.

현대차 부사장 윤여철도 “주간연속2교대제는 노사 모

두에게 윈윈”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저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노동자들의 심신을 쪼먹는 심야노동 철폐와 장시간 노동 개선이 아니다. 마르크스의 말처럼, “자본은 노동시간은 최대한 연장하려 하지만, 노동자들의 수명 연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점에서, 생산성과 노동강도를 높이면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한다면 그 의미가 삭감될 수밖에 없다. 생산 속도를 높여가야 표면적 생산성을 높이자는 게 그동안 총자본이 추구해 온 방향이다.

이때 2008년에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열위”를 지적하며, 효율적 근무시스템 구축과 유연근무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 등 주요 재벌들도 장기적 이익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방향을 무조건 배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초 현대차 사측이 제시한 ‘장시간 근로 개선안’을 치켜세운 바 있다.

현대차 부사장 윤여철도 “주간연속2교대제는 노사 모

생산성 향상

아쉽게도 지금 노동조합운동 내에선 ‘생산성을 높여야 심야노동 폐지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빠빠하게 일해 왔다. 1980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가율

은 8.5퍼센트로, 미국(3.8퍼센트), 일본(4.4퍼센트)의 두 배나 된다. 그러는 동안 노동시간이 크게 줄지도 않았다. 정부 통계만 봐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제조업 평균 노동시간은 1.2퍼센트 줄어든 반면, 생산성은 7.6퍼센트나 늘었다.

그런데도 정몽구는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 2014년까지 8백만 대를 생산(올해 7백만 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쪽에선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 노동과 실업을 시달리고 있는데, 왜 가뜰이나 일이 많은 노동자들이 더한층의 고강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가. 대규모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신규 채용이라는 대안을 내놓고 말이다.

다른 한편, 일각에선 ‘어느 정도의 임금 삭감을 감내하라’는 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에도 노회찬, 김유선, 박태주 등 노동운동의 주요 인사들은 임금 삭감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장시간 노동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고임금을 고집하는 게 문제’라는 지배자들의 역겨운 논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노동조합운동은 임금 삭감 논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안 그래도 낮은 기본급 때문에 잔업·특근에 매달리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왜 모르는가. 임금 삭감을 전제하는 것은 주간연속2교대제를 쟁취할 현장 조합원들의 힘을 꺾어버기만 할 뿐이다.

더구나 현대·기아차 사측은 지난 3월에도 사상 최고 수익을 누리는 등 더없는 호황으로 부를 쌓아가고 있는 마당이다.

사실 2000년까지만 해도 민주노총은 “어떤 경우든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노동유연화 없는 실현전망도 흐려졌다.

3무 원칙

3무 원칙을 내걸고 당당한 현대차 윤해모 집행부가 그 목표를 성취 가능케 할 투쟁 건설 없이 양보를 거듭하면서, 2009년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기회를 날려 버리고 중도 사퇴한 것이 한 고비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의 열기는 적지 않았다. 현장 조합원들은 윤해모 집행부의 양보안을 부결시켰다. 대의원들은 윤해모가 교섭장에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좌파 노조 지도부의 배신 뒤 당당한 우파 지도부 이경훈은 이를 교섭실 속에 가둬 버리고 더 큰 양보만 거듭했다.

따라서 이런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3무 원칙을 내걸고 실질적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 기아차의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이 기존 노동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현대·기아차 집행부가 ‘공동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그 가능성을 보여 준다.

1930년대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프랑스, 미국 등의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쟁취한 바 있다. 강력한 파업과 노동자들의 단결이 이를 가능케 한 힘이었다.

우리도 싸워서 이를 쟁취할 수 있다.

박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의 과제

현지 투쟁과 대정부 정치 투쟁의 결합

김지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참가자, '제주 해적기지' 표현으로 해군 당국이 고소해 법적 대응 준비 중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당국은 강정 마을에서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집회를 불허했다. 시위의 자유조차 짓밟으며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다.

특히 우파는 총선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한다. 제주 해군기지를 찬성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었으므로 기지 건설에 속도가 더 붙을 것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불신 속에 이를 이용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얻었을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제주도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제주도를 동양의 하와이로 만들겠다”는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절대 안 된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또 가장 강력하게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온 통합진보당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의석을 늘린 것은 의미심장하다.

사실 총선 전 정부가 구럼비 바위를 폭파했을 때 연예인들까지 나서서 온라인에 폭파 반대 인증사진을 올릴 정도로 저변에서는 광범한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보수언론과 우파가 내 제주 “해적기지” 발언에 총공세를 펼친 것 역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과 운동이 더 커지기 전에 기를 꺾으려는 시도였다.

우물쭈물 민주통합당

무엇보다 정부와 우파는 민주통합당을 약한 고리로 보고 파고들었다. 민주당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장본인이다. 이들은 단지 광범한 반대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반대 시능을 해왔다. 민주당의 이런 모호한 태도는 운동 내 혼란을 부추기거나 김을 빼는 구실을 해왔다.

예컨대 민주당 출신 도지사 우근민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 관련 청문회가 4월 12일 끝났지만 아직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 정부는 구럼비 폭파를 연일 강행하며 활동가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고 있다.

이번에 제주에서 당선한 민주당 의원들 역시 태도가 모호하다. 이들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제주 해군기지가 국



강정마을에서 열린 4·1 노동자대회 노동운동이 반제국주의 평화를 위한 투쟁에도 앞장서야 한다.

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항’으로만 건설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한명숙 전 대표는 총선 전 제주에 내려가서도 건설 “전면 재검토”만을 주장했다.

그래도 기지 건설 반대 운동 내 일부는 민주당에 기대를 걸면서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이뤄지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했다. 그리고 박근혜는 “무책임한 말 바꾸기”라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이는 반대 운동을 노린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소야대에 기대를 품다 보니 민주당을 비판하기 어려워졌고, 이것은 우리 편이 우파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통합진보당 역시 ‘문지마 야권연대’를 하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서 ‘전면 재검토’로 요구 수준을 낮춰

야 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 민주당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이 쟁점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이나 떠며 우리 편의 사기를 꺾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운동의 김을 빼는 사이에 정부는 조금치의 타협도 없이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 제주 해군기지가 제국주의 패권 전략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 연구소로 꼽히는 ‘ RAND연구소’는 “중국의 강력한 경제력 도전에 직면한 미국이 동중국해와 그 아래쪽 해역(동남아 지역)에 대해 힘을 행사하는 데 제주 해군기지가 결정적인 구실을 할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2009년).

이 운동의 목표는 명확히 ‘건설 반대와 백지화’가 돼야 한다. 이것은 이 투쟁이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맞서는 동시에 이를 지원하는 한국 정부에 맞서는 투쟁임을 뜻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MD(미사일방어체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영화배우이자 평화활동가인 로버트 레드포드의 지적대로 “제주 해군기지는 이시스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중국 측에서 위협한 도발이라고 주장한)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미국의 주장과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잠수함과 이시스함을 위한 대형 해군기지 건설 야욕이 맞물”린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따라서 이 운동의 목표는 명확히 ‘건설 반대와 백지화’가 돼야 한다. 이것은 이 투쟁이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맞서는 동시에 이를 지원하는 한국 정부에 맞서는 투쟁임을 뜻한다. 우파가 건설 강행으로 결집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운동 역시 명확한 결집점을 제시하고 광범한 반대 여론을 행동으로 모아나아가야 한다.

민주당처럼 ‘민국복합미항이 아니라 시 문제’라거나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 문제’라는 식으로 쟁점을 흐려서는 안 된다. “해적기지” 발언이 문제였다며 우리 편의 뒤통수나 치는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도 삼가서는 안 되며 민주당과 독립적인 운동 건설에 나서야 한다.

경찰과 해군의 무자비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고 처절하게 싸워 온 강정 주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도 계속돼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2003년 전남 부안 주민들은 방사능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에 맞서 타협 없이 단호하게 싸웠고 방폐장 유치를 막아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 투쟁의 한계 때문에 방폐장 건설 자체를 막는 것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경주로 방폐장이 옮겨지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강정 주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중심인 수도권 한복판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건설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투쟁 참가자들은 해군 기지 건설이 동아시아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런 만큼 투쟁을 강정 마을로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지배자들은 이 투쟁을 전국적 시안으로 삼고 힘을 집중하고 있다. 3월 초 이명박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한미 FTA와 더불어 주요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가장 반대하는 것이 제주 해군기지와 한미FTA”라는 색깔론도 함께 펼쳤다.

지금 해군기지 건설은 중앙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강행하고 있다. 경찰과 해군은 물론이고 언론까지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맞서는 운동 역시 전국적 관점을 가져야 하고 수도권에서 중앙정부를 겨냥한 대규모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2002년 여중생 압사 항의 시위도 서울에서 대규모로 벌어졌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2002년 6월에 의정부에 살던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직후 11월까지의 주로 의정부부를 중심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그러던 중 미군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한 네티즌이 서울 광화문 시위를 제안했고, 이 투쟁은 폭발적으로 번져 나갔다.

11월 26일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12월 14일 집회는 서울에서만 10만 명이 모였고 전국적으로 30만 명이 참가했다. 경찰 저지선을 뚫고 미 대사관 앞까지 행진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이 운동에 압력을 느낀 미국 대통령 부시는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

해군기지 건설이 무산된다면 제주를 기지 삼아 대중국 봉쇄를 펼치려는 미국의 패권 전략이 위협받을 것이다. 미국에 빌붙어 이익을 챙기려는 한국 지배자들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다. 결국 중앙정부와 미국의 패권 전략에 맞선 정치적 투쟁으로 운동을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무기와 군사 기지 건설에 쏟아 붓는 막대한 돈을 평범한 사람들의 복지에 쓰라고 요구해야 한다.

미국 한국정책연구소 특별연구원인 크리스틴 안은 제주도가 “격렬한 저항 운동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이제 제주도를 넘어서 육지로, 수도 한복판으로 저항 운동의 장은 확대돼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행위’는 이런 방향으로 운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사회운동 불법 사찰

노동운동만이 해결 자격과 능력이 있다

“BH[청와대] 하명”으로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을 광범하게 사찰한 사건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주요 언론 보도에서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이영호 등 깃털들만 구속하고는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할 인물들이 한둘이 아닌 데다 모든 증거들이 이명박을 향하고 있는데도 파렴치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은 ‘몸통’ 이명박과 물타기를 한 박근혜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더는 이 사건을 파헤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선거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궁리만 하다가 되레 자기들의 추악한 과거를 들켜 버렸고



2008년 촛불 시위에 참가한 공무원 노동자들 노동자들이 이런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데 불법 사찰의 목적이 있었다.

자신들이 한 사찰은 ‘합법적인’ 것이라며 발뺌하다 보니 이명박의 사찰을 제대로 공격할 수 없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 현대차 노조, 화물연대, 쌍용차 노조 등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활동에 대한 사찰기구들의 감시와

“작전”은 다 ‘합법적인’ 것이고 일부 언론과 정치인에 대한 감시는 불법이라고 하는 저들의 논리야말로 대규모 사찰 사건의 본질을 잘 보여 준다.

본지 지난 호에서 지적했듯이 진보진영은 이 사건의 본질이 1퍼센트 지배세력의 99퍼센트에 대한 계급지배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정부 투쟁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하겠다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형식적인 말잔치로 끝날 게 뻔하다. 2008년 촛불항쟁에 떠밀려 시작된 ‘최고기 국정조사’조차 지부진하게 시간만 끌다 유야무야 끝나 버린 바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 내 일부가 사실상 민

주당에 보조를 맞추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에 운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민주당 정부 때 이뤄진 사찰을 제대로 비판·폭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사찰의 총책임자인 이명박은 퇴진해야 하고, 임태희, 권재진 등 관련자들은 전원 구속·처벌돼야 한다. 사찰에 동원된 각종 사찰기구와 국정원, 기무사, 검찰·경찰의 공안부서 등도 즉각 해체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찰의 핵심 대상이었던 노동운동이 이런 요구를 내걸고 싸워야 한다. 오는 메이데이 집회에서 민주노총이 이런 요구도 함께 걸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해야 한다.

장호중

“중국 전역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이나 레이버 볼리틴’(http://www.clb.org.hk)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중국 노동자 지원 단체다. 차이나 레이버 볼리틴의 대변인인 제프리 크로설을 만나 최근 중국 노동자 투쟁의 양상에 대해 인터뷰했다.

최근 중국에서 파업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자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법적 권리를 지키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에게 자기 불만을 제기할 다른 공식 통로가 없습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고용주들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저임금, 긴 노동시간, 고용주의 부당한 요구, 열악한 노동환경 등이죠.

이 파업들에서 패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최근 지난 10년간 벌어진 파업 사례들을 분석했습니다. 노동쟁의의 약 70퍼센트가 제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중국 노동쟁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민간이 소유한 제조업 기업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전역의 다양한 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운수 분야에서 많은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운전사, 트럭 운전사와 택시 운전사 등이 파업과 운행 중단 투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로 임금의 가장 낮은 집단이기 때문에 갈수록 많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저임금을 받는 유치원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서방 언론들의 중국 파업 보도를 보면 수출 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민공)이 주로 언급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젊은 이주노동자들이 피고용인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중국 노동자’인 것입니다.



다. 따라서 청년 이주노동자들이 파업과 투쟁을 주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또, 이들은 [호구제도 때문에] ‘이주민’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도시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도시 주민으로 생각합니다.

파업 노동자들이 대표를 직접 선출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광범한가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조 선거에 출마하거나 고용주와 애기할 협상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 노동자들은 경영진과 직접 담판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지방 정부가 노동자들 대신에 협상을 벌이거나 중재자 구실을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커지면서 경영진과 한 자리에서 협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영노조의 틀 밖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립 노조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노동자들은 국영노조가 좀더 민주적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중화전국총공회에서 독립된 노조 건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총공회에서 임명한 정부 관료나 공무원이 노동자들 ‘대표’로 협상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공장의 노조 지부에서 민주적으로 대표가 선출되기를 바라며, 노조 대표가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매체 —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토론방 등 — 이 중국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중국 BYD 노동자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팻말을 들고 저임금에 항의하는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10~20대인 청년 노동자들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에 아주 익숙합니다. 거의 모든 청년 노동자가 마이크로 블로그, 토론방,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투쟁을 조직할 때 이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보통 인터넷 토론방에서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마이크로 블로그에서 투쟁과 경영진과의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합니다.

중국 내에서 파업에 관한 소식이 널리 보도됩니까?

보도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신 보고서에서 관영 언론이 파

업을 보도하는 횟수를 분석했습니다. 2000~2006년에는 거의 보도가 없었습니다. 보도가 되더라도 “정부가 사회 소요를 진압했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민간과 상업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파업이 보도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업 초기부터 보도를 하고, 노동자를 인터뷰하면서 문제와 불만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정부는 이런 보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정부는 앞으로도 일부 보도를 금지하거나 보도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갈수록 보도 자체가 아니라 보도 내용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런 시도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중국 청년

들은 관영 언론이 아니라 주로 소셜미디어에서 소식을 접합니다. 관영 언론이 소셜미디어를 뒤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중국 파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적 협상이나 단체협상을 통해 불만을 해결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파업을 벌일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투쟁 경험을 쌓고 효과적인 협상 기술을 체득하면서 좀더 체계적인 단체협상 방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파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2년 4월 호 / 번역 김용욱

지배층 분열을 보여 준 보시라이 파문

찰리 호어 <천인문으로 가는 길>(책갈피),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다함께의 저자)

언론들은 최근 권력에서 밀려난 보시라이에 관해 온갖 선정적 내용들을 보도한다. 특히, 언론들은 보시라이의 처가한 영국인 기업가 살해 사건에 연관됐을 가능성을 집중 보도한다.

그러나 보시라이의 운명은 현 중국 상황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보시라이는 충칭 시 공산당 서기이자 정치 거물이었다. 올 하반기 중국 공산당은 앞으로 5년간의 당 전략을 발표하는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보시라이는 9명으로 구성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으로 뽑힐 가능성이 컸다.

보시라이는 관료들의 부패를 비판하고 문화대혁명의 ‘좋은 시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로 유명했다.

그의 몰락은 1989년 이후 공개적으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지배층 분열이었다.

1989년, 한 인기 있는 지도자의 사망이 아래로부터의 대규모 저항(텐안먼 항쟁)을 촉발했다. 군대는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서 수천 명을 살해한 뒤에야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다.

보시라이는 보통 ‘태자당’의 일원으로 여겨진다. 태자당은 아버지 덕분에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공산당 관리들을 지칭한다.

그들은 공산당, 경제, 정부와 군대 등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태자당은 특정한 정책들을 지지하면서 단결한 분파는 아니다.

보시라이가 몰락한 것은 그가 너무 야심이 많았기 때문인지 특정한 정책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른 고위 관료들의 비리와 중국 최고위층 내부의 분열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됐다.

중국 최고위층은 미래 경제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분열해 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는 성장률

이 높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경제는 주로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에 값싼 소비재 상품을 수출하면서 성장했다. 이 20년 동안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퍼센트씩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발생한 경제 위기는 그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 줬다.

중국 정부는 주택, 도로, 철도와 공항 등을 건설하는 것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으로 위기에 대응했다. 또, 공장들이 문을 닫지 않게 지원하면서 성장률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지금까지 이 방법은 먹혔다. 그러나 대가가 매우 컸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매우 심각하며, 지방 정부들은 되갚기 불가능한 액수의 적자를 쌓았다.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지만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중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경제가 충격에 빠

지면서 더 심화하고 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성장률을 유지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수를 늘릴 여지는 있다. 1983년 중국 GDP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몫은 56퍼센트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겨우 38퍼센트였다.

두려움

중국 지도자들은 이런 변화가 이미 불만으로 가득한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워한다.

1990년대부터 이른바 ‘집단 사건’ — 파업, 소요, 시위와 기타 투쟁 등을 가리키는 정부 용어 — 이 계속 증가해 왔다.

중국 정부는 더는 집단 사건 통계를 발표하지 않지만 지난해에만 대략 10만여 건이 발생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은 단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전국적 운동이 아니다.

각각의 투쟁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시작되며 직접 연관된 사람들 밖으로 확산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근본 원인 — 관료 부패, 공해, 저임금 등 — 은 비슷하다. 하나의 투쟁이 광범한 반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시라이는 이런 대중적 불만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했고 그 덕분에 몰락했다. 어떤 지도자들은 기층의 분노를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파업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이는 이런 개혁이 1989년 텐안먼 항쟁과 같은 심각한 반란이 발생하는 것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그들은 똑같은 사건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판돈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 지배자들은 이런 모순에서 쉽게 빠져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보시라이는 이런 분열이 낳은 희생자였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희생자는 아닐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300호 / 번역 김용욱



계급이 사라져야 평등해진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현 시기 한국 민중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 주는 문제는 사회양극화, 다시 말해 불평등이다. 아직도 우파와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낙수 효과’ 운운하며 성장 중심 사회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를 경험한 한국 민중에게 이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번역 출판된 리처드 월킨슨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는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 책의 장점은 명확하다. 좌파라면 누구나 직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설득력 있는 증거로 드러낸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대중적으로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킨슨과 피킷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평등한 사회일수록 건강 문제나 사회 문제가 더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매우 광범위하다.

평등한 사회일수록 사회구성원 상호간에 신뢰가 높아진다.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정신질환자가 많고, 약물을 더 자주

복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가 평등할수록 오래 살고, 유아 사망률이 낮다. 소득 불평등이 작을수록 비만율이 더 낮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15세 학생들의 수학, 읽기 점수가 낮고, 고등학교 자퇴율이 높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10대 출산율이 높다.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살인은 더 자주 발생한다.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학교 폭력도 더 자주 발생한다. 불평등한 사회는 감옥도 더 많고 죄인을 더 오래 가둔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수감된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사회 이동성 혹은 계층 이동성도 낮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노동시간도 더 길다. 평등한 사회일수록 투표율도 높다.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의 목록은 끝날 줄을 모른다.

저자의 주장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의 영향이 저소득층에게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불평등은 인구 대다수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측면에서 저자들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전략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 이득을 준다고 주장한다.



《평등이 답이다》
리처드 월킨슨, 케이트 피킷
이후 | 2만 1천 원 | 4백48쪽

또 최근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도 평등이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 정책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평등한 사회가 그러한 정책을 펴기 쉽다. 둘째, 평등한 사회일수록 대중이 소비주의에 포획될 가능성이 적다.

저자들은 이런 데이터에 근거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 정책임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몇몇 개별적인 건강 프로그램이나 복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다. 정치적 의지에 따라 기획된, 일관된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의지

그러나 이 책은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있다.

먼저 건강불평등 이론 측면에서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로 ‘사회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회관계와 상호 신뢰가 깨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소득 불평등은 계급 차이에 의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이 건강을 파괴한다.

한편, 저자는 인간 사회가 더 평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로, 인간의 평등에 대한 ‘본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저자가 ‘좌파 다윈주의’ 혹은 ‘좌파 사회생물학’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돼 있다는 사회생물학 이론의 좌파적 판본이고, ‘기계론적 환원주의’의 한 변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자는 불평등의 기저에 존재하는 근본 모순인 생산수단의 사유화 문제와 착취 문제에 눈을 감고 있다. 불평등이 문제고 그러니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지만, 불평등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이고 정치경제학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그러니 그에 따른 해결책도 시장과 자본주의를 용인한 상태에서 다양한 재분배 정책과 임금 정책, 생산 관계에서의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성장’만을 도돌이표처럼 외쳐대는 우파들에 대항하기 위해, 그리고 불평등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일련의 정책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책 전문가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좌파들이 적극적으로 인용해야 할 실증적 증거들의 보고임에 틀림 없다.

아랍의 봄 — 자유민주주의 혹은 독재로 회귀?

1848년 대중 혁명이 전 유럽을 휩쓸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오늘날 우리가 아랍 혁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랍 혁명의 엄청난 규모에 놀란 평론가들은 역사에서 그에 견줄 사건을 찾아보며 이 혁명의 성격을 이해하고 혁명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려 애쓴다. 이들은 거듭거듭 1848년 유럽을 휩쓴 혁명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 않다.

1848년 초 혁명은 2011년 중동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수도에서 다른 나라의 수도로 전진해 나갔다. 시실리의 봉기는 파리의 반란을 알리는 신호였다. 3일 만에 왕이 망명을 떠나고 공화국이 선포됐다. 혁명의 불꽃은 베를린으로, 빈으로, 부다페스트로, 밀란으로 번져 갔다. 혁명가들이 교황 주변의 스위스 출신 호위병을 물리치고 로마를 공화국으로 선포하자, 교황도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1848년 초 넉 달 동안 총 50여 차례 반란이 터져 나왔다.

둘째, 1848년 혁명도 2011년 중동처럼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 정치적 자유와 의회 선출 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봉기로 시작했다.

1848년 유럽 ‘인민의 봄’이 여러 사람들에게 오늘날 ‘아랍의 봄’의 판박이처럼 보이는 첫째 이유는 혁명 이후 노동계급에 뿌리내린 대중적 사회주의 단체들이 출현했다는 점 때문이다.

사회주의 사상은 중동에서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예컨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의 공산당은 대중 정당으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모두 중요한 사회 세력이었다. 그러나 이 정당들은 스탈린주의의 영향으로 거듭거듭 자본가 계급의 ‘진

보적’ 분파와 동맹하는 전략을 취했고, 그 결과는 늘 재앙이었다. 이 전략의 반복된 실패로 공산당이 점차 지지를 잃으면서, 그 공백을 틈타 정치적 이슬람*이 성장했다.

많은 평론가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정은, 오늘날 중동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하는 대중적 흐름이 없기 때문에 아랍의 봄 앞에 남은 실질적인 문제는 민주주의가 승리하거나 권위주의가 겉모습만 달리한 채 되돌아 오거나(1848년 혁명의 결과가 그랬다) 둘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1848년 혁명의 속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마르크스가 “소유 문제”라고 언급한 계급 문제가 처음엔 “인민”의 민주주의 혁명 안에 숨어 있었지만 점차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도에서 일어난 정치 혁명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삶의 물질적 변화를 위해 전투에 나섰다. 그 결과 농부는 지주를 공격하고, 사유재산으로 바뀐 숲에 침입했다(때로는 삼색기를 앞세워 행진하기도 했다). 파업도 일어났는데, 특히 인쇄공과 건설 노조가 앞장섰다.

정치 사상에 대한 갈증이 분출했다. 집과 일터 주변에서 토론하고 조직하려고 모인 정치 클럽이 곳곳에 만들어졌다. 1848년 봄에 이르자, 파리에서만

2백 개 정치 클럽이 회원 7만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투쟁 성과 보존을 위한 중앙 협회’ 회원이 무려 50만 명에 이르렀다. 혁명적 신문도 두터운 독자층을 자랑했다.

과거 혁명에 동참했거나 적어도 동조했던 새 자본가 계급 중 일부는 이렇게 아래로부터 분출하는 격변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새 혁명 정부의 지도부 자리를 재빨리 낙야했다.

이제 그들은 대중이 단지 지주들과 구질서에 속박된 사유재산뿐 아니라 모든 사유재산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했다. 1848년 6월, 새 부르주아 정부는 반란을 촉발했고 결국 파리를 피로 물들였다. 반란에 가담한 1천5백 명이 전투에서 사망했고, 포로 3천 명이 사살됐다. 수천 명이 투옥되고 국외로 추방됐다. 마르크스는 이 전투를 가리켜 “현대 사회를 양분하는 두 계급이 치른 첫 대전투”라고 일컬었다.

연속 혁명

파리의 반동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벌어질 반혁명을 향한 신호탄이었다. 그 뒤에도 반란은 몇 차례 더 이어지지만, 1849년 말이 되면 아래로부터 혁명은 완전히 패배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오직 노동계급만이 농민을 대신해 혁명을 전진시키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우리의 이해관계, 우리의 임무는 혁명을 영속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 스스로 다시 주장했듯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그런 구실을 하기에 노동계급의 발전 정도가 너무 미약했다. 산업화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 심지어 파리조차 시장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긴 했지만 소규모 작업장과

장인식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바로 이 점이 1848년과 아랍의 봄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다. 오늘날 이집트에만 노동계급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이집트 마할라의 섬유 공장은 중동에서 가장 큰 공장이다. 걸보기에 아직까진 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듯한 걸프 지역 국가들도 지난 30년 동안 자본주의가 도입되며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그래서 예컨대, 이 지역의 도시 거주민 비율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쿠웨이트가 98퍼센트, 카타르가 96퍼센트, 사우디아라비아가 82퍼센트다.

“소유 문제”는 1848년보다 오늘날 아랍의 봄에서 더 핵심적인 과제다. 이 점

은 예컨대 이집트와 튀니지(또는 쿠웨이트)에서 반복된 파업 물결을 통해 다시 드러났다. 불균등하긴 하지만 1백60년 넘게 이어진 전 세계적 자본주의 축적 덕분에 중동 지역에서 “혁명을 영속시킬” 잠재력이 더 커졌다. 2012년 중동의 노동계급은 1848년 유럽 어느 지역의 노동계급보다 거대하고 집중돼 있고 강력하다. 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을 더 큰 사회 변화와 연결시킬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은 다시금 광범한 청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크 토마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2년 4월 호 / 번역 조명훈

기간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2호 2011년 겨울

www.marx21.or.kr

가격: 16,000원

쟁점 오늘의 위기와 저항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
미국 '정거하라' 운동의 의의
오늘날 중국의 저항 운동
계속되는 이집트 혁명
카타피 몰락과 리비아의 앞날

특집 알렉스 캘리니코스 2011년 방향 강연 (2)

금융화와 오늘의 세계경제
사회민주주의 —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인민전선이 진보운동의 패배를 부르는 이유
대답: 오늘의 세계와 혁명적 좌파

기획 연재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1. 마르크스의 경제위기론과 그에 대한 비판

서평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한국 노동계급은 쇠퇴했는가?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리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2년 120,000원
3년 180,000원	5년 300,000원
7년 420,000원	10년 600,000원

외국인 혐오 확산 논란

우파의 위선적인 이주민 차별 정책에 반대해야

오원춘 살인 사건 이후에도 중국 동포 이주자들의 범죄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온라인에서 '조선족'에 대한 인종차별적 목소리가 커졌다.

사실 오원춘 사건은 경찰이 국민의 안전에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 준 대표적 사건이다.

특히 경찰은 가난한 노동자들과 이주민, 노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 밀집된 지역의 치안에는 무관심하기 이를 데 없다. 대표적 부촌인 강남의 범죄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은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경찰과 언론들은 이런 계급적 문제를 회피하려고 흔히 특정 표적을 성난 대중에게 던져 준다. 사람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여겨 국가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조처에 동의해 주거나, 범죄의 공포와 분노를 특정 표적에게 표출하곤 한다. 온라인에서 뜨겁게 일어난 '조선족' 이주민에 대한 마녀사냥은 이런 배경에서 커졌던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면 언제나 '외국인 범죄 대책'이 쏟아지고, 이주민 밀집 지역에 대한 통제와 단속이 눈에 띄게 증가하곤 한다. 이번에도 안산·울산·경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의 범죄 대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인 범죄율이 외국인 범죄율보다 훨씬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율 통계를 보면, 2010년 전 국민 중 범죄자 비율은 3.58퍼센트이고 외국인 범죄율은 1.78퍼센트다.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한 범죄를 살펴봐도, 외국인 범죄율은 국민 전체 범죄율보다 낮다. 심지어 외국인 범죄가 부각되면 자동으로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되는 미등록 이주민의 범죄율은 더 낮다.

보수 언론들은 외국인 범죄, 그중에서도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낯선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의 공포'를 부추



이준기 기자

이주민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다 이주민에게 범죄자 이미지를 덧씌우고, 그들을 차별해 온 것은 바로 정부와 우파다.

기면서, 낯선 사람과 외국인을 등치시키고 더 큰 공포를 조장한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의 공포'는 범죄에 관련된 대표적인 신화 중 하나다. 살인·강간 같은 끔찍한 범죄들은 여전히 가족, 친척, 애인, 친구 등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정부가 경찰이 내놓은 범죄 예방 조치는 전반적인 감시 통제를 강화한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조치는 억압과 편견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의 위협은 사실 온라인의 잠깐의 소동보다 출입국관리국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인 통제와 억압과 차별 — 일상적인 수색과 불심검문, 자의적 체포와 구

금, 인종차별적 폭언 등 — 이 훨씬 크다.

이런 제도화된 인종차별이 광범위한 편견을 부추기고 강화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는 때에는 훨씬 공격적이고 조직된 인종차별적 극우 단체들이 형성될 씨앗이 될 수 있다. 지난 20여 년 간 유럽의 파시스트와 극우 집단들은 이런 반ռ이민 선동을 통해 성장해 왔다.

위선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반대 정서와 다문화주의의 반대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 왔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 때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을 추진했고, 2010년 G20 때는 청와대가 직접 지

휘하며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또,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결혼 이주민들의 '위장 결혼'을 막겠다며 비자 발급과 국적 취득 절차를 강화하고 안정적 체류를 위협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2003년에 현대판 노예제로 악명이 높았던 '산업연수제' 폐지를 한사코 반대했고, 2004년에는 '불법체류자들의 반한 활동' 대책을 요구하며 이주노동자 운동을 탄압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자스민 논란에 "일종의 사회병리현상인 외국인 혐오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

한 것은 위선일 뿐이다. 외국인 범죄를 열 올려 보도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던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이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을 우려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역겹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1퍼센트를 대변한다는 대중의 불신에서 벗어나려고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결혼 이주 여성을 내세웠어도, 이들이 진정으로 다문화화를 실천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부와 우파의 위선에 맞서면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억압받는 사람들과의 연대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방어하고, 이주민 차별과 인종차별에 일관되게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정원

기고 | 미국의 인종차별

후드티 입은 흑인은 죽음을 각오하라?

크리스 킴 미국 국제사회주의조직(ISO) 활동가

지난 2월 말에 플로리다 주 샌퍼드에서 비무장한 17세 흑인 청소년 트레이번 마틴을 사살한 자경단장 조지 짐머맨이 4월 11일 2급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4월 20일 세미놀 카운티 법원의 판사는 짐머맨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이 결정으로 마틴 가족은 크게 실망했다.

마틴이 먼저 가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로 총을 쏘았다고 주장한 짐머맨은 4월 11일 전까지 단 한번도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 여러 사회 활동가·단체 들의 조직적인 압박에 법무부와 미국연방수사국(FBI)은 트레이번 마틴이 사살된 지 한 달 후에야 짐머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제 트레이번 마틴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한 전국적인 토론을 자극시켰다"고 썼다.

비무장한 흑인 청소년을 "마약 같은 것을 했거나 무언가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자로 여긴 짐머맨의 인종차별적인 선입견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실종된 아들을 찾으려고 트레이번 마



사진 출처 David Shankbone (유티커)

'1백만 후드티를 입은 사람들 행진'에 참가한 플로리다 시민들 인종차별에 도전하는 투쟁이 부활하고 있다.

틴의 아버지가 24시간 동안 계속 911에 연락했지만 경찰은 마틴의 소지품인 휴대폰에서 마틴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 전미유색인종협의회(NAACP)의 의장인 벤 질러스는(데모크라시 나우)에서 "젊은 흑인 남성들이 경찰 혹은 경비에게 사살됐을 때 심각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 무엇이 인종 문제인가?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있는 미국 사회를 흔히 '탈인종적' 사회라고 한다. 즉, 흑인 노예제도나 인종분리제도를 인정한 짐 크로우 법은 과거의 일이고 이제 미국은 인종을 뛰어 넘은 사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비무장한 흑인 청소년을 무조건 의심해야 할 존재로 보는 치안 방식은

미국 사회에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에만 벌써 흑인 29명이 경찰에게 사살됐으며 그중 16명은 트레이번 마틴 사건 이후의 희생자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뚜렷한 객관적 근거 없이도 흑인들을 의심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경찰들의 '인종 프로파일링'이다.

트레이번 마틴 사건과 인종차별 문제가 화제가 되면서 이 사건의 인종차별적 요소를 들춰낸 건 다름 아닌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언론 <포스뉴스>였다. 3월 23일 시사 해설자 헤라르도 리베라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젊은이들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후드티를 입고 외출하지 못하게 하라"며 트레이번 마틴이 후드티를 입고 외출하게 한 그의 부모를 비난했다.

리베라는 후드티를 '갱스터' 스타일과 연관시키며 "후드티는 짐머맨만큼이나 트레이번 마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말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인종의 범죄화

사실 많은 흑인 부모들은 자식들의 옷차림이 경찰의 폭력을 불러일으킬까 봐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백인 젊은이들의 후드티 차림은 문제가 안 된다. 감옥 제도와 인종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치 활동가 엔젤라 데이비스는 '흑인'과 '범죄자'를 연결시키는 이런 인종차별적인 암시를 '인종의 범죄화'라고 표현했다.

오늘날의 현실은 보수 세력이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성과를 공격하려 하면서, 1982년 레이건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유색인종들을 집중적으로 감금해 온 것과 관련이 있다. '약물 중독과 정신 건강 서비스'가 마약 사용 비율에서 인종들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조사를 내놔지만, 연방 정부는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교외보다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빈민가에 훨씬 많은 경찰들을 배치했다.

이 사실은 '마약과의 전쟁'의 근본적인 목적이 '마약 문제'가 아닌 '인종 프로파일링'에 있음을 보여 준다. 그 결과, 백인에 비해 흑인이 마약범으로 걸릴 가능성이 2~11배나 된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뉴욕에서는 시민 68만 4천여

명이 거리에서 검문을 당했는데, 그중 87퍼센트가 흑인과 히스패닉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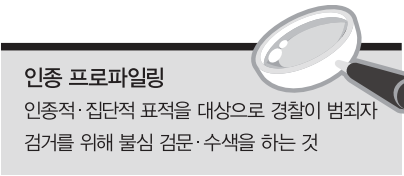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법과 교수인 미셸 알렉산더는 현재 미국 감옥에는 1850년대 미국의 흑인 노예 수보다도 많은 흑인들이 투옥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국 통계를 보면 2001년도에 태어난 흑인 남성의 32퍼센트가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데, 백인 남성의 경우는 6퍼센트에 그친다.

주류 언론들은 트레이번 마틴의 사건을 예외적인 사건으로 다루지만, 경찰 폭행과 인종 프로파일링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투옥된 흑인 피해자 가족들과 많은 흑인들에게 이 사건은 '전형적인 사건'이다.

미국 전역에서 작게는 수백 명에서 크게는 수천 명이 참가한 '1백만 후디(후드티를 입은 사람들) 행진'과 인종 프로파일링을 반대하는 반(反)인종차별주의 조직들, 다인종적 연대는 보수언론들이 숨기려 하는 미국 사회의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많은 활동가들은 트레이번 마틴의 사건을 계기로 주류 언론이 무시한 여러 도시의 비슷한 사건들을 새롭게 조명하며, 인종차별과 경찰 폭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해 경찰 폭행을 겪은 월가 점거 운동의 활동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에 도전하는 투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이 글의 전문은 <레포트21> 웹사이트(www.lett21.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단결 투쟁을 바랍니다”

현대차 사측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외면한 채 탄압과 공격을 지속하면서,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문제가 다시금 부상했다. 다행히 최근 몇차례 연대 집회가 이어지는 등 투쟁도 시작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하청 공동 투쟁을 강화하며 사측에 맞서야 한다. 이런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차 노조 통합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지가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들에게 이런 투쟁의 과제를 들어 봤다. 인터뷰 한 홍영출 조합원은 2010년 25일간의 비정규직 점거파업 때 108배 등을 하며 노동자 연대를 호소한 정규직 활동가다.

장병운 조합원은 비정규직지회 3공장 전 사업부 대표로, 2010년 점거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후에도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홍영출 현대차 정규직 조합원

“정규직 노조가 모든 것을 걸고 연대해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사측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쉽게 정규직 전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하청이 단결해서 싸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서로 사는 길입니다. 원·하청이 공동투쟁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지회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정규직 노조도 비정규직과 단결해야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측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비정규직지회가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조직화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화도 비정규직지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걸고 연대해야 합니다.

문용문 집행부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과제를 받았습니다. 주간연속2교대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용문 지부장은 ‘비정규직 지부장’이라는 말을 들을 각오로 올인해야 합니다. 당선 후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용문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는 안 됩니다. 현대차 노조가 못 풀면 누가 풀겠습니까? 우리가 일정한 성과를 내면 전국적으로 퍼질 것입니다. 그만큼 사명이 큰 거죠.

이번에 원·하청이 단결해서 성과를 낸다면 1사1노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가입에 공감하지만 꼭 직가입만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원·하청 연대회의’에서 조율하면서 1사1노조를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장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문용문 지부장이 현장 순회하고, 교육하고, 설득하면 정규직 현장 조합원들은 따라올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정동석 현대차 울산4공장 현장위원장

장병운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단결은 비정규직 조직화와 고용에 이로워”

“올해는 어느 때보다 힘을 받는 싸움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치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 문제로 제기하고 정규직지부도 임금단체협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원·하청 단결 투쟁에 대한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정규직지부가 움직이면서 집회 규모가 늘고 지부가 주최한 비정규직 간담회에도 비록 적은 수지만 비조합원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도 정규직 대의원들이 연대해서 대대적인 조직화 사업을 해 울산 공장에서만 2천여 명까지 조합원 수가 늘었습니다.

늘 관리자들의 눈치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대의원들이 버팀목이 되고 바람막이였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측은 우리가 투쟁에 나설 때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되면 정규직의 노동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지겹도록 해 왔습니다. 원·하청 단결 투쟁이 잘 되려면 이런 사측의 이간질에 함께 맞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조 집행부와 활동가들의 역할이 큼니다.

1사1노조는 원·하청 단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비정규직 조직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비정규직 동지들이 1사1노조를 크게 지지하는 이유는 최소한 고용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에선 지부 집행부의 통제가 커져, 지회 중심성을 잃어 버리면 투쟁의 결집도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규직 지부를 안 끼고 투쟁을 할 수 있는지 반문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역량 강화는 존중하지만, 정규직지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주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인터뷰·정리 김기선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5월 9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대학 청소 노동자 투쟁

10퍼센트 넘는 임금 인상을 따낸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6개 작업장 노동자들이 10.87퍼센트의 높은 임금 인상을 따냈다. 기본급 외에도 점심 식대, 명절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인상도 얻어냈다.

지난해 노조를 만들고 처음 임단협에 나선 경희대는 통상임금 인상률이 20퍼센트가 넘는다. 집단교섭이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를 상당히 평준화시킨 것이다.

교섭대표인 한정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장은 “대학의 유령 같은 존재였던 청소 노동자들이 톨밭 문쳐 자신들의 힘으로 노동조건을 상승시켰다”며, “학생,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적 상황이 청소 노동자 투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여당은 총선을 앞

두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 언론 파업 탄압 등 공세를 강화해 우파 결집을 시도하면서도, 학생들의 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록금과 대학 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에서는 일부 양보해 불만을 달래려 했다.

광범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문제들까지 공격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던 것이다.

정치적 부담

지난해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승리하자, 대학 당국들은 복수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투쟁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 분회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서경지부 지도부는 이번 교섭

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복수노조를 이용해 악랄한 탄압을 하고 있는 홍익대와, 교섭을 앞두고 있는 동덕여대·덕성여대에서도 투쟁을 강화하고 연대를 확대해 맞서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가 6월 최저임금 인상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해 광범한 사회적 지지 속에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성공적인 투쟁을 벌였지만,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이런 투쟁·성과와 결합되지 못한 채 꺾였었다. 결국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은 청소 노동자들이 따낸 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쳤다.

민주노총은 올해 임단투, 노동법 개정 투쟁 속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조명지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하라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우파의 기사회생을 돕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의 빛줄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 공장 밖으로 쫓겨난 해고자들이 이윤에 타격을 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진보정당과 단체들, 좌파들이 광범한 연대 투쟁을 건설해야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다. 쌍용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3천여 명이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으려면, 국공에선 공기업화 같은 일자리 보장을 위한 대안도 필요할 것이다.

사진 이윤선 / 글 박설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투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생취하다!

공공운수노조 남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 노동자들이 57일간의 끈질긴 투쟁으로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고용 승계, 셔틀버스 운행 재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왔다. 특히 정규직, 직접·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조로 뭉치고, 조합원 1백 퍼센트가 파업에 참가할 정도로 견고하게 투쟁했다.

지부 사무국장은 “오랜 파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지만, 조합원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싸웠다”며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노동조합의 연대가 확산된 것도 승리의 요인이었다. 또, 순환버스 운행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확대를 요구하면서 지지를 끌어낸 것도 주요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적

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비판받았던 통합진보당의 배진교 구청장도 늦었지만 다행히 노동조합의 편에서 사측을 압박했다.

압박

김현익 공단 이사장과 사측은 “친노 조직적인 남동구청장이 만든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각을 세우고 남동구청측이 제출한 이사장 해임 건의안도 부결시키며 버텼지만, 결국 노동자들이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연대가 확산되자 무릎을 꿇고 말았다.

투쟁이 승리하면서 오는 7월부터 1백 20여 명의 만 60세 이하 비정규직과 민간위탁 노동자들(사무보조·주차관리원·미화원·전일강사·현수막 개첩원 등)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월급제 혜택을 받게 됐다.

만 60세를 초과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도 고용이 보장됐고, 파업 기간 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징계·민사·형사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물론 단일 호봉제의 적용을 받게 되고, 상여금과 자녀 학비수당 등에서 기존의 정규직과 차별이 있는 것은 아쉽긴 하지만 말이다.

이번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의 통쾌한 승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차별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다.

김동은

독자토론광장

5월 9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Letter@left21.com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 비판

우클릭으로 우파를 견제하자?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은 근래 오른쪽에서 ‘진보·개혁 진영’에 부적절한 주문을 하는 대표적인 언론인이다. 그는 지난 2월에 쓴 칼럼에서 “반미의 늪”에서 빠져나와 세상을 “냉정”하게 볼 때가 됐으며 한미FTA를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4월 18일치 칼럼에서도 오태규 논설위원은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가 4·11 총선에서 밀린 데는 안보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가 큰 작용을 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이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친 게 문제였고 김지운 씨의 ‘해적기지’ 발언이 이런 이미지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중원”을 상실한 게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려면 “안보 불안

세력이 아니라” 점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는 게 오태규 논설위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진정한 문제는 진보 간판만 내걸고 좌클릭 시능만 한 것이었다.

좌클릭 시능

민주당은 우파의 ‘해적기지’ 발언 마녀사냥에도 쫓쫓매며 모호한 태도만 보여서 우파의 사기만 올려 주고 진보적 유권자들에게 실망감만 안겨 줬다. 그래 놓고서 이제 ‘해적기지’ 발언 때문에 선거에서 손해 봤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운동 정치”가 아닌 ‘선거 정치’의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그의 주장도 위험하다.

물론, 선거와 대중투쟁의 관계가 단

순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중투쟁이 활성화되면 진보 개혁적 후보들에게 더 유리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예컨대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되고 민주노동당이 약진한 것도 총선 직전 노무현 탄핵에 반대하는 거대한 정치 시위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파들의 공격을 막아 내려면 “운동 정치”가 필요하다. 대중투쟁만이 KTX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비롯한 우파들의 공격을 막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이 이런 구실을 제대로 할 거라 기대할 순 없다.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아래로부터 투쟁을 건설해나가야 한다.

강철구

복지 재정 확대로 전면 무상 보육 실시하라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말 많은 ‘무상 보육’ 정책이 또 한 번 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정부가 하위 70퍼센트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보육 시설에 아 이를 맡기는 모든 계층에 지원하기로 결정해 놓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2~3개월 후에는 0~2세 영유아 무상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다”며 무상 보육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들과 아이들이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식 ‘무상 보육’은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보육 교사 처우 개선과 같은 공공 인프라 구축 없이 시행되다 보니 결국 영리 목적을 우선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되



국공립 보육 시설과 보육 교사 채용을 확대해 진정한 무상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 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해야만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엄청난 노동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양육은 워킹맘이나 전업주부

모두에게 힘든 일인데도 말이다.

진정한 무상 보육을 실현하려면 보육 시설 이용과 상관 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보육 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무상 보육은 많은 부모들이 원해 왔고, 진보진영에서도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복지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 부족을 핑계로 무상 보육 후퇴를 협박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상 보육 후퇴 없이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와 이를 위한 부자 증세 등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어느 것을 희생할 것이냐 하는 관점이 아니라, 부유세 신설, 국방비 축소 등으로 복지 재정을 확대하고 무상 보육을 포함한 전반적 복지를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장미순

티베트 저항 운동은 중국 노동자 투쟁과 만나야 한다

4월 19일 중국 티베트 자치지역에서 티베트인 두 명이 또 분신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중국의 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티베트인은 34명으로 늘었다.

죽음을 불사한 티베트인들의 저항은 바로 60년 넘게 이어져 온 중국의 점령과 지배에 원인이 있다. 그동안 티베트인들은 한족에 비해 정치·경제·민주적 권리 등 모든 면에서 엄청난 차별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다.

따라서 티베트인들의 투쟁은 매우 정당하다. 우리는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 연대에 함께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티베트인들의 분신과 시위를 막으려고 삼엄한 경계를 펼친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라오는 분신 자살자의 이름, 나이, 발생 시각 등도 즉각 삭제된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의 독립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티베트인들의 가슴에 중국에 대한 분노가 커져야 쌓였기 때문일 것이다.

‘인류의 도덕’

2월 2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홍레이는 “2011년부터 쓰촨성 등에서 분신 사건이 이어지고 일부는 사망해 가슴이 아



중국 노동자 투쟁의 분출은 티베트 저항 운동을 고무할 수 있다.

프다. 이는 불교 교리와 인류의 도덕에 반한다. 달라이 라마 집단은 분신 시도를 멈춰라” 하고 강변했다. 그러나 연이은 분신의 진정한 ‘배후 세력’인 중국 당국이 달라이 라마를 지목하며 ‘인류의 도덕’ 운운하는 것은 역겹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와 최근 보시라이 몰락이 보여 주듯, 중국 지배 체제의 불안정성 때문에 중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분출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중국 노동자 투쟁의 분출은 티베트 저항 운동을 고무하고 티베트인들에게 중

국에 맞설 수 있는 커다란 자신감을 불어 넣을 것이다. 또한 티베트 저항 운동이 중국의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중국 지배계급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위기의 수렁 속으로 빠뜨릴 수 있을 것이다. 티베트 저항 운동이 반드시 중국 노동자 투쟁과 만나야 하는 이유다.

중국 지배계급의 분열 지배를 뛰어넘는 중국인들과 티베트인들의 연대 투쟁은 국제적 연대와 더불어 티베트의 잃어버린 봄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

김기철

통합진보당은 울산에서 노동계급의 표를 잃었는가?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에서 크게 약진했다. 그런데 어떤 좌파들은, 통합진보당이 울산에서 1석도 얻지 못한 것을 두고 통합진보당이 노동계급에게 노동자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계급의 표를 잃은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울산의 선진 노동자 다수가 통합진보당을 더는 노동자 정당으로 느끼지 못해 선거에 기권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는, 전반적인 정치 환멸 속 낮은 투표율과 함께 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이 민주노동당 시절과 비교해서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이 없다고 여기는 데 굳이 투표소로 갈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차 노동자들이 모두 진보정당을 지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선진 노동자들의 의식 역시 불균등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그들도 적극적 지지에서 소극적 지지 등의 편차가 있다. 또한 투쟁 경험이 없는 노동자는 경상도의 지역주의나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울산에도 민주통합당의 기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가 통합진보당을 찍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17대 총선에서 적은 득표를 했고, 18대 총선에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으며, 19대 총선에서는 야권연대 경선에서 통합진보당에게 패배했다.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지지자에 의한 통합진보당 득표의 착시 효과는 작다고 볼 수 있다.

울산 북구에서는, 투표율이 58.3퍼센트로 18대 총선의 47.8퍼센트에 견줘 10퍼센트가량이나 늘었다. 통합진보당 후보의 득표율 역시 47.2퍼센트로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 열풍 속 17대 총선의 46.5퍼센트와 비교해도 약간 높을 뿐 아니라, 18대 총선의 31.6퍼센트에 견주면 훨씬 높았다.

울산 동구의 투표율 역시 59.8퍼센트로 18대 총선의 47.7퍼센트에 견줘 10퍼센트가량 늘었다. 통합진보당 후보의 득표율은 43.3퍼센트로, 17대 총선의 23.5퍼센트에 견줘 2배가량 획득했고 진보정당 중 진보신당 후보만 출마한 18대 총선에서의 진보신당 후

보의 득표율 32.1퍼센트에 견줘서도 매우 높았다.

득표수를 비교해 보면, 울산 북구에서는 18대 총선보다 통합진보당 지지자가 2만 명가량 늘었다. 19대 총선의 총 투표수는 18대 총선보다 2만 5천 명가량 늘었는데, 이것은 늘어난 총 투표수 중 우파 후보를 지지한 5천 명을 제외한 80퍼센트 정도가 통합진보당 후보를 지지했음을 뜻한다.

울산 동구는 19대 총선의 총 투표수가 18대보다 1만 5천 명가량 늘었는데, 통합진보당의 득표수가 18대 진보신당 노옥희 후보(진보정당 중 진보신당만 출마)의 득표수보다 1만 5천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아 통합진보당이 늘어난 투표수를 거의 다 흡수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추가로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우파정당의 득표율은 하락했지만, 이들의 득표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즉, 늘어난 선거인단과 투표인단의 대부분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계급표

따라서 울산의 노동자들이 더는 통합진보당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보지 않아, 통합진보당이 계급표를 잃어 울산에서 1석조차 얻지 못했다는 주장은 틀렸다.

선거 결과는 통합진보당이 여전히 울산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시절과 비교해도 상당히 지지가 늘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울산의 선진 노동계급이 여전히 통합진보당을 노동자 정당이라고 본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울산에서 1명도 당선하지 못한 이유는 박근혜가 우파들을 효과적으로 결집한 것에 비해, 진보진영은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이 협력하지 않고 낯뜨거운 비방전 등 분열을 일삼았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좌파는 통합진보당의 우경화와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종파적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묻지마’ 야권연대 대신 진보대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영민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토론회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정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부산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고장 난 자본주의의 대안 —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연사 : 전지윤(레프트21) 편집인

일시 : 5월 2일 (수) 오후 6시

장소 : 부산대 사회관 203호 강의실

참가비 : 2천 원

문의 : 010-5331-1968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99-13 3층 303호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508-5147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8-5 4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west.atg@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2-6338-2395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jforum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89-2 201호



언론 파업에 승리를!

파업을 강화하며 연대를 구축하자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확보하자, MBC 사장 김재철은 “MBC노조가 금방 파업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또 “총선 직후부터 [파업 조합원] 수십 명씩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도 퍼뜨렸다.

그러나 언론 노동자들은 총선 결과에 동요하지 않고 단호하게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MBC 간판 오락 프로인 <일밤>은 1퍼센트 시청률을 기록했고, 파업이 지속되자 <불만제로> 작가들이 ‘더는 못하겠다’며 일손을 놓아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대구 MBC 노조는 대구 MBC 낙하산 사장 내정에 항의해 23일부터 정규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하고 방송을 멈춰 세웠다.

KBS도 업무에 복귀했던 예능과 드라마 PD들이 다시 파업에 동참하고 기자회견이 제작 거부로 동참하면서 방송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KBS에서는 사상 최초로 보직간부 22명도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동참했다.

물론, 사측은 총선 직후 언론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고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KBS 새노조 농성장을 침탈했고, 불법 사찰을 폭로한 최경영 언론장악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전격 해고했다.

MBC 사측도 전국 19개 지역 간부 57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 위협, 비정규직 기자와 PD 등 대규모 신규 채용 공고, 시사교양국과 보도제작국을 없애는 조직개편 시도 등을 시작했다.

그러나 파업 중인 언론 노동자들은 사측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KBS 새노조는 여의도 공원에서 노숙 농성을 하며 매일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MBC 노동자들은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해 파업 미참가자들이 일하는 보도국실에 들어가 팻말 시위를 하고, 4월 23일부터 본관 로비 농성과 지역 조합원들의 상경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에 참가한 박광수 여수 MBC 지부장은 “김재철이 퇴진하지 않으면 파업을 접을 수 없다”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투쟁이 정치권에도 압력을 가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파업 지지 발언이 나오자, 그동안 KBS 새노조의 파업 공백을 메우며 방송을 제작해 온 KBS 구노조도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사측의 대체인력 채용에 항의하는 MBC 기자 1백여 명의 보도국실 시위. 이런 행동을 확대해 대체인력 투입을 막고 방송을 멈춰야 한다.

**지배계급의 분열을 이용해
이명박과 새누리당에 맞서는
정치투쟁 전선을 구축하자. 본관
로비 농성을 유지·확대해 강력한
거점 투쟁을 벌이고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것 등을 통해
방송 차질을 확대해야 한다.**

조의 파업을 “단순한 정권 심판론의 공허한 구호”로 치부하고, 김인규 사장 퇴진 요구를 회피해 온 것은 큰 문제다. 이것은 구노조의 파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낙하산 퇴진

진정 낙하산 사장 선임 구조를 개선하려 한다면, 방송의 독립성·자율성 훼손의 주역인 김재철과 김인규 퇴진을 내걸어야 마땅하다. 구노조는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태도를 반성적으로 평가하며, 언론노조 파업을 전폭 지지하고 동참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호 기사에서 박설 기자가 “구노조 지도부의 잘못을 이유로” 단결 추구에 소극적인 KBS새노조를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한편, 총선 직후 민주통합당 대표 대행 문성근은 19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지도부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프레스센터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고, 방송사 노조들도 “정치권에 국정조사를 계속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언론 파업을 위해 대체 뭘 했

냐’는 비판을 받아 온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지지에 나선 것은 노동자들이 굳건히 싸워 온 덕분이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국정조사·청문회에 기대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총선 직후 민주당 박지원은 언론 파업 때문에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더구나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했던 국정조사들은 모두 시간만 질질 끌다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BBK, 쌀 직불금, 광우병 쇠고기 국정조사만 떠올려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나 특검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는 얘기도 거듭 나왔다.

무엇보다 청와대 낙하산 사장이 방송을 장악해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저들에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기회를 주는 국정조사·청문회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중운동의 뒷받침이 없다면 국정조사나 청문회 그 자체로는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는 이유다.

따라서 ‘MB언론장악 심판, MB낙하산 퇴출, 공정보도 정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낙하산 사장에

맞서 파업을 확대하고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정권 실세’였던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이 이명박의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이 폭로되는 등 정권의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다. 이를 이용해 이명박과 새누리당에 맞서는 정치투쟁 전선을 구축하자. 본관 로비 농성을 유지·확대해 강력한 거점 투쟁을 벌이고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것 등을 통해 방송 차질을 확대해야 한다. 전국적인 연대 투쟁도 광범하게 건설해야 한다.

노태우 정권 말기의 레임덕을 이용해 로비 점거파업과 광범한 노동자 연대로 승리했던 1992년 MBC 파업 때처럼 싸워야 한다.

반갑게도 민주노총은 언론 파업을 지지·엄호하려고 5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도 5월에 “언론노조 차원의 전국적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말이 행동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영준

www.marxism.or.kr

맑시즘 2012

7월 26일(목) - 29일(일)

장소 서울 주최 노동자 연대 다함께 문의 02-2271-2395, marxism@marxism.or.kr

맑시즘은?

12년째 열리는 맑시즘은 국내 최대 규모 진보 포럼입니다.

나홀 동안 1천 5백여 명의 학생, 청년, 노동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이 시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는 곳!

더 나은 세계를 바라는 모든 분들을 맑시즘 2012에 초대합니다!

● 아이가 있는 참가자들을 위해 무료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해외 연사 파노스 가르가나스

내뽀 정책에 맞선 그리스 노동자들의 생생한 투쟁 소식을 전할 사회주의 활동가

반자본주의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이자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BK)의 리더.

1967년 그리스 군사쿠데타에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그리스의 핵심적 사회주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맑시즘 2012에서 긴축 정책에 맞선 유럽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한국처럼 20세기 후반 군사독재와 신자유주의를 경험한 그리스의 노련한 사회주의자가 전하는 투쟁의 경험과 고전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한국의 노동자들과 반자본주의의 활동가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줄 것입니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외에도 많은 노동운동·사회운동 활동가들, 진보적 학자와 저술가들이 맑시즘 2012 연사로 오십니다.



흥미진진한 포럼들

뜨거운 현안과 노동자 투쟁의 역사, 마르크스주의의 일반 이론까지

끝나지 않는 경제 위기, 반통과 제국주의 개입에 맞서 지속되는 아랍 혁명, 경제 위기 시기의 노동조합 투쟁, 2012년 대선과 좌파, 제국주의와 동아시아·한반도의 지정학적 변동, 민영화, 20세기 혁명의 역사,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마르크스의 방법론 등 수십 가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되는 정보는 웹사이트(www.marxism.or.kr)에서 확인하세요.

● 맑시즘 2012의 백미! 바로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석 토론입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3~4분의 발언 기회를 보장합니다.